

第248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2004年7月9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1. 제248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국회사무총장(남궁석)임명승인안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정치에관한질문

附議된案件

- | | |
|---|---|
| 1. 제248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 |
| 2. 국회사무총장(남궁석)임명승인안(의장 제의) | 1 |
| 0 국회사무총장(남궁석)인사 | 2 |
|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 |
| 4.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 |
| 5.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 |
| 6.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 |
| 7.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 |
| 8. 정치에관한질문 | 4 |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 제안한 대로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7월
1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1. 제248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국회운영
위원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국회(임시
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국회(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

2. 국회사무총장(남궁석)임명승인안(의장 제의)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항 국회사무총장(남
궁석)임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사무총장에 남궁석을 임명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승인 대상자의 재산신고사항 및 병역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임명승인안과 국회공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김형주 의원, 윤호중 의원, 최성 의원, 최재천 의원, 김양수 의원, 이기우 의원, 이계경 의원, 최순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난 안에 국회사무총장(남궁석)임명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15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2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2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 수 225표 중 가 190표, 부 33표, 무효 2표로서 국회법 제109조 규정에 의해서 국회사무총장(남궁석)임명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사무총장(남궁석)인사

(10시35분)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임명승인해 주신 남궁석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남궁석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남궁석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국회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짐을 나르는 세르파로서 선수인 여러 의원님들이 정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4.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5.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6.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3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해

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남경필**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남경필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체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 관계 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규제개혁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역시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등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3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역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미래 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해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역시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도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5건의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5인으로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8인 중 찬성 218인으로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6인, 기권 2인으로서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에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정치에관한질문

(10시47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8항 정치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오전 12시경까지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나머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은평갑 출신 이미경 의원입니다.

17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정부 여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사태 이전으로 다시 내려가고 촛불시위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여당의 핵심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 김선일 씨 피랍·살해사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고위 공직자의 청탁 로비 의혹 등으로 비판적인 언론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심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총선 승리, 탄핵 기각으로 세상을 다 얻은 듯 자만했던 것이 저희 실수입니다. 장강의 뒤 물이 앞 물을 밀어내지만 그 뒤 물도 어느 순간 앞 물이 되어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를 깊이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좀더 겸허해지고 우리의 어깨 위에 더 큰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의 속도, 특히 정치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국민의 반응 속도에 대해 매우 놀라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두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7월 5일 안풍(安風)사건 항소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96년 총선 때 안기부 계좌에서 흘러나온 1000억 원의 출처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7월 2일 모 조간신문의 1면 톱에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로비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7명의 동료 정치인에게 100만 원의 후원금을 주었다면서 로비 의혹의 실체라고 합니다.

1000억 원과 100만 원의 차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후원금의 차이, 잠 잘 잤다는 김영삼 씨와 잠을 설쳤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정치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불공평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한 치의 흠결도 없는 정직한 정치를 위해 이 물밀듯한 변화의 속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부패하고 낡고 썩은 정치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를 거대한 패러다

임의 변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혁명, 권위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획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낡고 부패한 정치 질서로부터 새롭고 투명한 정치 질서로의 전환, 이런 대전환기일수록 사안사안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상황을 양극단으로 몰아가거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은 단연코 자제되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선도하고,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부임하신 지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운영 구상을 했겠습니까마는, 저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사회, 정부와 경제계 등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와 국회의 관계 문제인데요, 전에는 청와대에 정무수석이 있었는데 폐지되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러다 보니 정치적 조정 채널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거의 정무수석과 같은 포괄적인 정치조정 기능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대의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총리실 산하에 의회국이나 의회보좌관제도를 설치해서 정부와 국회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상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폐지되었고, 여러 집행 기능을 총리실에서 많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인력으로 봐서도 대단히 버거운 일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지시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과 기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총리실만이 아니고 각 부처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제사회발전협의체 건설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해 당사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발전 의제들을 모두 다룰 수가 없고 정부의 중재 기능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 정당 기업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경제사회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성장과 분배, 복지, 사회안전망, 국민통합, 이런 제반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고 미래의 국가 비전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의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재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이런 위원회하고의 조정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는 더 검토를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외국의 모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유사한 정부 내의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충성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다음 사회갈등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부안사태가 상징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데 정부의 주요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리 시민사회와 사전 협의하고 토론, 조정하는 갈등 예방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부안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 감정적 앙금이 남아 있어서 언제 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적합의촉진기본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사업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 법을 깊이 검토해서 적극 뒷받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아시는 것처럼 공공정책 수립 시 갈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도 여러 가지 시안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법이 잘 성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지금 흑백을 떠나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조정이 정부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갈수록 커져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다음으로는 서울 교통대란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 이명박 시장의 불도저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입니다. 준비안 된 교통체계의 개편 때문에 서울시민들 출근시간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서두르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자신의 취임 2주년 기념식에 맞추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교통대란이 서울시민들 무관심 때문이라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공사, 시청 앞 잔디광장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0년대 개발 독재의 유령이 서울을 망치고 있습니다. 1200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제멋대로 시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이 문제는, 저도 서울시에서 근무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교통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서 신속하게 가도록 하고 자가용은 가능하면 출퇴근 때는 안 쓰도록 하는 서울시의 기본방향은 저는 정책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준비가 좀 미흡하고 시민들이 아직 그렇게 의식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많이 생겨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체계 개편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원인이 여하하던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이 덜 불편을 겪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서울시하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로 하여금 상황을 더 파악해 보도록 하고 그러고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저는 작금의 서울 교통대란이 역설적이게도 행정수도 이전의 불가피성을 웅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셔서 잘 아실 텐데, 요즘 서울 도심의 교통속도 평균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20km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1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시속 30km였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이 재작년 기준으로 5조 3000억 원이나 됩니다. 91년도에 1조 3000억 원이었으니까 10년 사이에 4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하더라도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교통문제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이미경 의원** 또 대기오염도 미세먼지가 선진국의 1.7배~3.5배나 되고 이산화질소는 1.7배나 많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연간 8조 6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서울은 죽은 서울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을 살리자는 동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행정부의 판단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까? 그런 예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정부는 국회가 정한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령을 충실히 집행하는 복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법령을 지시하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정한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나라당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당론으로 통과시킨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지금 와서 발목을 잡고 취소하라고 선동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 불신임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서울의 과밀 해소,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안풍사건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안기부 자금 1000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1심 판결과는 다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김영삼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현재까지도 자금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자금 문제로 사실상 간접수사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 적용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만 예외로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외로 대접한 바는 없고요, 2심에서 강삼재 의원 발언 이후에 법원에서 바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한 수사 자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철회됐는데 현재로서는 자금의 성격, 출처와 관련해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상고심 결과를 보고서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그러면 수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현재로서는 일응은 상고심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안기부 예산을 횡령했느냐, 아니면 대선 잔금이나, 혹은 당선축하금이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악한 권력의 부패상을 반영한 것으로 과감히 단죄해야 하고 불법자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국민 전체의 법 감정도 부합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정치자금환수법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저는 정치가 경제를 선도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부패 척결에 있어서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장관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입장입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강금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수사기능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직접 수사기능은 고비처와 같은 기구가 생겨서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수사의 지휘감독과 기소는 현재의 체제상 검찰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넘어서는 지휘감독의 배제나 기소권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은 권력의 견제, 균형, 분리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고비처에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주면 고비처 자체가 막강한 권력을 갖는 권력기관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견제나 통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소권까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그러나 과거에 검찰이 특검제 도입에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때도 기소독점주의 시각에서 반대했었는데요, 기소독점이 좋다 나쁘다

이런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무엇이 국민에게 이로운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특검에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특검 때문에 검찰 수사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기소권의 문제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에서 깊이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는가 묻습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강화된 권력을 분리시키는 방법은 기소권까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 기능을 일차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특검하고 고비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간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보충성을 원칙으로 엄격하게 적용한 수사 원칙이었고 한시적 기구였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한시적 기구였기 때문에 위헌성을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현재의 고비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판정문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정문 초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무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직접 검토는 안 했지만 의문사위원회에서의 발표 이후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7월 6일자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회 관계를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경우에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최종 결정은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로 본다면 7월 6일자 심의위원회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미경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결과 중심적인 비약적인 해석이 아니었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의문사위의 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또 과거 체제 수호라는 미명하에 행해졌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계획되고 의도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태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문사위의 전체 활동으로 확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포로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협약도 있듯이 설사 비전향 장기수들이 과거 우리 체제를 반대했던 적의 입장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자유 민주 체제의 존립 근거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이해의 충돌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방향타를 잃은 채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에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근본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위해서 남파된 간첩이 줄지에 민주인사로 둔갑되었던 일이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또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서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최소한의 임무마저 방기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라도 좋으면 다행이런만 국민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대통령은 '위기가 아니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1만 불 근처에서 9년째 맴돌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제 생각보다는 수도 이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화관광부에서 드러난 인사청탁 문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한 거짓말 게임을 잘 보여 주었고, 탄핵방송의 공정성 심의에서 국가 기관이 드러낸 직무유기와 무능함은 국민들의 시름을 깊게만 했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 온 나라인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비전도 국가 목표도 사라진 채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절반 정도 반대가 있고 한 40% 정도 찬성이라는 여론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면 대통령을 불신임 또는 퇴진하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적절한 말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신행정수도가 단순히 행정수도의 이전만이 아니고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문제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어려워질 경우 전체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라든가 지방분권화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들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강조어법이라도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었나 이겁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글썄, 그런 가치판단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낸 논평도 그렇고 신문에 난 것도 그렇고 기사를 면밀히 읽어 보면 그런 전체적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의 큰 틀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강조어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축약을 하자면 행정수도 반대는 대통령 불신임이다, 대통령 퇴진이다, 따라서 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수도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강조어법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가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한 반대를 대통령에 대한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누구나 찬반이 있고 반대의견을 가질 수 있지요.

○심재철 의원 그러면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불신임까지 연결합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가치판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드리는 것은, 그 말씀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총리로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긴급 여론조사에서 70% 정도의 국민이 부적절했다라고 답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총리는 판단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개인적인 판단이야 있겠지만 총리가 하는 공무적인 일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느낌이나 판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것은 판단을 안 해야 될 사안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나름대로 판단이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무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을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결국 ‘행정수도 반대는 대통령 불신임이다’라는 발언은 적절했다 이 말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법령에 의하면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그런 감성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정책을 보좌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게 바로 정책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말씀 표현 자체는 정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을 해서, 원래 대통령이 갖고 계신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수도권 과밀 해소,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정책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정권에 반대한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정책에 반대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정책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행정수도에 반대할 수가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에 반대한다라고 연결시키는 건 잘못된 거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잘잘못의 판단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심재철 의원** 아니, 본인 스스로 그랬잖아요. “정책에 반대한다고 어떻게 정권에 반대한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했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지 가치판단을 가지고 보좌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가치판단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께서.

○**국무총리 이해찬**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다고요?

○**심재철 의원**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정권에 반대한다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정책에 반대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정책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행정수도에 반대할 수 있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에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직결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못하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라니까요.

○**심재철 의원**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가 그렇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것은 잘못인데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겠다 이 얘기군요?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는 총리의 신분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을 정책으로 보좌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호, 불호를 가지고 보좌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호, 불호가 아니라 국민의 과반수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는 곧 대통령께서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느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재철 의원** 똑같은 얘기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다릅니다. 느끼신다는 것과 그렇게 언명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심재철 의원** 내가 느낀 점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재철 의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요체, 대통령의 말씀의 본질 이것을 가지고 정책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대통령의 표현의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이 발언의 본질은 행정수도에 반대하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당시 대통령께서 그렇게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재철 의원** 본인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장내 웃음)

○**심재철 의원** 대통령 말대로 하면 국민의 과반

수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국민의 과반수가 불신임한다고 본인은 느낀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불신임한다고 느낀 것은 아니지요. 과반수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모 신문사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인이 느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핵심을 회피하지 마시고 언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심재철 의원** 진실이 행정수도에 반대하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본인이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재철 의원** ‘나는 아프게 느낀다’ ‘나는 아프다’ 두 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나를 불신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주관적 판단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부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적절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재철 의원** 수도를 영어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행정수도를 건설한 뒤에 세계지도책에 코리아의 캐피탈은 어디로 표시가 됩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게 헌법상의 규정은 아닙니다. 헌법상의 규정은 아니고 다른 나라는 헌법에 규정한 나라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저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서울특별시행정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을 수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

인 사례입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하면 거기가 세계지도책에 수도로 표시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심재철 의원** 결국 수도 이전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행정수도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수도가 옮겨가는 것이니까 세계지도책에 수도 표시가 신행정수도로 표시가 되고 따라서 그것이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수도 이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재철 의원** 예, 특별하게 이 문제에 관련한 개념이 드디어 ‘수도 이전’이라는 게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만 몇 개 확인을 하십시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심재철 의원** 국민들의 합의와 참여가 있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비용도 엄밀하게 계산되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심재철 의원** 안보비용은 아직 계산이 안 들어갔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지 평가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요.

○**심재철 의원** 따라서 안보비용은 아직 계산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몇조다 45조다 120조다라는 데서 안보비용은 전면적으로 빠져 있다 이 얘기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120조라는 얘기는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가 분석한 것으로는 정부 예산으로 들어갈 예산이 11조, 그리고 민간 부문이 34조, 그중에서 주거비용이 34조 중에서 27조, 상가와 다른 비용이 7조 해서 34조입니다. 그래서 45조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 금년도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수도방위비용은 계산이 안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 45조에는 건설비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일반 기관 건설비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수도권보비용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대통령께서 ‘아, 재미 좀 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략적인 접근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정략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정책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공약에 대해서 여러 찬반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수도권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선거 결과가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가지고 승부해서 이겼다는 뜻이지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캠프나 어느 선거 후보나 자기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평가받아서 당선이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정략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이 바뀌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잘 아시겠지만 선거 전에는 당선 후 1년 이내에 투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올해 초에는 법 통과 후에라도 논란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이미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국민투표 공약은 종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바뀌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국민투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 봤듯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위에 관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명령이라든가 비상사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아주 한정된 것만 한해서 직접 국민의 의

사를 묻도록 되어 있는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대통령의 신임 문제까지도 대상이 아니라는 현재의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이미 집행 단계에 있는 법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국가안위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 사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수도 이전, 수도방위전략은 매우 중요하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전략은 중요하지요.

○**심재철 의원** 그런데 변경이 되면 따라서 수도방위전략도 변경이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겠지요.

○**심재철 의원** 국방에서 수도권 방위가 최우선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국방에서 수도권 방위가 최우선인지는 제가 국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심재철 의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매우 중요합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국방의 안보전략이 바뀌는데 국가의 안위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러나 이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국가안위에 연결된다면?

○**국무총리 이해찬** 우리 헌법의 개정사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원래는 정책사안을 헌법에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되어 있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쪽 가지고 오다가 80년도에 왜 개정을 했느냐 하면 너무 여러 정책사안을 직접민주주의 형식으로 부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커서 잘못하면 권위주의 정권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조항을 빼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대단히 제한적인 한정적인 조항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비상사태라든가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치라는 뜻으로 개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본인의 느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심재철 의원**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과반수가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큰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 후에 대통령하고, 제가 공교롭게 어제 부산에 갔다 오는 바람에 대화를 못해 봤는데 그런 느낌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불신임이라는 게 대통령의 느낌인데 그렇게 자기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심재철 의원** 본인이 그렇게 크게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느꼈다고 보도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이 부분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 국민들은 그 얘기를 하지 마시오, 반대하지 마시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전혀 아니니까 그것은 내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국민들께서는 알아서 자유스럽게 찬성·반대를 표명하시오, 이거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표명하시는 것은 좋은데 행정수도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게 아니고 지금 행정수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반대하면 나에 대한 불신임이고 나에 대한 퇴진이다, 그렇게 나는 느끼고 있다,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간접적인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아니, 직접적인 위협 아닙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해찬**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반 토론을 하고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민주화가 되겠습니까?

그 정책 내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데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통령도 하고 계시고 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충분히 국민들의 합의와 참여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정부에서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국정홍보처에서?

○**국무총리 이해찬** 최근에 여론조사한 것을 제가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국정홍보처, 엇그제 상임위에서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던데요?

○**국무총리 이해찬** 국정홍보처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나 하기는 했?

○**국무총리 이해찬**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정부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다른 기관에서 한 부분은…… 그것은 그 기관에서 문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정부에서 했던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아니, 그 결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했더라는……

○**국무총리 이해찬**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문서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

는지를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래야 제출을 해 주시겠다?

○**국무총리 이해찬** 가능한 서류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국정홍보처와……

○**국무총리 이해찬** 다시 말씀드리는데 언론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재철 의원** 국정홍보처하고 발언이 다릅니다. 두 군데를 대질을 해 보겠습니다.

간첩을 최근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아까 강금실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공안권력기관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제안하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심재철 의원** 분명히 그 결론에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 문건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심재철 의원** 나는 못 했으니까 모르겠다, 이것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모르는 것이 아니고 취지는 알겠는데 문서상의 확실한 표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다 그런 뜻입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간첩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민주인사냐 이거예요?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인사라고 표현된 문건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다니까요.

○**심재철 의원** 민주화에 기여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잘못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잘잘못의 판단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의한 민주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

다.

○**심재철 의원** 의문사위 쪽에서는 이것은 ‘민주화다’, 보상심위 쪽에서는 ‘아니다’…… 2개의 기관이 서로 다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런데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는 보상심위의위원회 판단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랬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다면 민주화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글쎄, 저도 민주인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재철 의원** 따라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래서 결국 간첩을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 민주인사다’라고 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규정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잘잘못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 놓고 왜 그렇게 말을 빼세요?

○**국무총리 이해찬** 말을 빼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민주인사나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관의 그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은 엄정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다시 말해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총리로서의 제 역할은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결정을 내려놓은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 기관의 법률적 판단 여부는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법률……

○**심재철 의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민주인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 점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했던 간첩의 행위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 판정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장내 웃음)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정책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의원** 판정했고, 판정 안 했고 그래서 보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책이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제가 판단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법무부장관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방금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 민주인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개각을 했는데, 개각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개각은…… 대통령께서 여러 부처를 판단해 보건대 이번에 개각된 부처에서는 개각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물을 제청하도록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부처에 관련해서 충분히 대통령의 취지를,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서 세 차례인가 네 차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청 절차를 거쳤습니까?

○**심재철 의원** 개각의 요인이 무엇이었냐고요?

○**국무총리 이해찬** 통일부는 장관님이 지난 국민의 정부 때부터 장관을 오래하셔서 지금 2년 반인가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전 정부 때부터 계속해 온 장관님 중 몇 분 안 되시는 분 중의 하나인데 본인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의 표명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도 1년 반, 초기부터 해 왔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로 또 사의를 표하셨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래의 직업인 예술인으로 돌아가서 활동하겠다, 그런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 개각의 사유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무슨 큰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국무총리 이해찬** 세 분이 무슨 도덕적인 결함이나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제

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사유입니다.

○**심재철 의원**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개각을 한 것이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재철 의원** 대권주자 관리용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쓰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면 뭐였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아까 말씀드린 사유에 의해서 그 분야에 적절한 인물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 오래되었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그랬다 이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이창동 장관께서는 1년 5개월 가까이 하셨는데 소설도 쓰시고 영화감독도 하는 분이어서 본인의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셔야겠다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재철 의원** 문광, 통일, 복지……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세 사람이 거명되기 전에 진작부터 “아이고 힘들다,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사의 표명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언제부터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저한테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 그전부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저는 그 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표명을 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각의 사유가 쉽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대권주자 관리용 정치개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하고 거리가 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의원** 안풍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아직 최종심은 아니지요. 지금 2심 판결이 난 것이지요.

○**심재철 의원** 3심은 법률심이니까 2심이 그대로 간다고 봐야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의 판단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심재철 의원** 형법을 적용했는데요, 물론 대법에서의 법률심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더군다나 사법부의 독립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총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심재철 의원** 자, 그렇다면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신한국당에 대해서 가해졌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이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대법의 판단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심재철 의원** 지금 상태에서는?

○**국무총리 이해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된 상황을 가지고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삼가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심재철 의원** 당시 옛날에 청와대와 여당은 “간첩 잡는 예산을 빼돌려서 선거자금으로 썼다.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랬습니다. 당시에 총리께서도 새천년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공산당 잡으라는 안보 예산을 도용한 범죄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법에서 만일 무죄 판결이 난다면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라고 반성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건 대법 판결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심재철 의원** 본인께서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신분이 행정 각부를 통할해야 되는 집행부에 있는 사람인데 사법부에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거나 그걸 전제로 해서 뭘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게 말씀은 고상하게 하시지만 당시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이것을 대야 공격 소재로 삼았던 여권에서의 정치공작 실태가 드러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건 심 의원님께서, 대법 판

결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판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그때 판결 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심재철 의원** 그동안에 죽 정부 공사들, 이런 저런 공사, 진흥공사 뭐 해서 여러 가지 낙하산 인사들이 있었는데, 낙하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낙하산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자체 승진하지 않고 외부의 인사가 와서 임명되는 걸 말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왔느냐, 그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 자체는 공식적인 인사 절차가 아닙니다. 공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충분히 심사를 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임명되면 그것이 외부에서 왔건 내부에서 됐건 그것은, 더군다나 개방형 인사체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회에서는 인사 내용 자체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앞으로도 낙하산 인사는 그런 절차와 사람의 적정성이 있으면 필요하고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가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낙하산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외부에서 기용하는 경우도 사람의 능력과, 많은 능력,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뽑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개방형 인재 등용 체제입니다.

○**심재철 의원** 문광부 인사 청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는 “인사 청탁 폐가망신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사자들 어떻게 폐가망신시키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당사자인 문광부차관은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정부에서는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 정도면 폐가망신으로 충분함

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정부에 차관으로 있는 분이, 말하자면 자기 아는 사람 인사 청탁을 강압한 것도 아니고 요청을 해서 그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오랜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사퇴하고 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큰 대가를 치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예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밀저야 본전이 아니다. 반드시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고위직에서 갑자기 중도에 스스로 사표를 낸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큰 타격을 보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 서프라이즈 대표 서영석 씨가 이번에 이 인사 청탁에 이렇게 개입이 됐는데 이분도 지금 패가망신시킬 생각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이고 민간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심광현 영상원장은요?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분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요?

○**심재철 의원** 청와대 발표를 국민들은 별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잘못된 겁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청와대에서 당사자들의 전화 그것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통화 내역을 다 확인을 했는데 정동채 장관께서 사퇴한 그 차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체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시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국민들은 믿지를 않는데, 그렇다면 국민들 잘못된지, 아니면 그 발표가 잘못된 건지 둘 중 하나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발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는 사실이고, 다만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내려온 오랜 사회적 분위기,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흔쾌히 믿지 않는 그런 사회 풍토가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심재철 의원** 차관이 어떻게 앞으로 자기 상관으로 올 사람인데, 직속 상관으로 오실 분인데, 그분의 확인도 하지 않고 단순히 전문만 듣고 인

사 청탁에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핵심적인 의문입니다.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국민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즘에는 그런 인사 청탁이 잘 안 되는 투명한 사회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통용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도 제가 제청한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동채 장관은 차관이나 혹은 당해 학교나, 또 정동채 장관만이 아니고 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 한번도 그분들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재철 의원** 방금 말씀하실 때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 발표는 사실이다” 이 얘기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 2개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까요?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된 것인지, 발표가 미흡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다 이거예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아주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자꾸 그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명백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입증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국민들이 차츰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현혹시키는 활동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의원** 제가 현혹시키는 겁니까?

(장내 웃음)

○**국무총리 이해찬**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이라크에 곧 파병을 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예정입니다.

○**심재철 의원** 파병을 했을 때 실리는 뭘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여러 가지 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 국가전략도 있고, 또 대외신인도, 국제사회에

서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이해관계도 있고, 한미 동맹 관계의 안정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이익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번에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받았을 때는 이미 살해된 상태였고 굉장히 거기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지금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더 확인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기되는 걸로도 교민 보호에 관한 것이 좀 소홀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얻어지는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약했다, 이런 것은 현재까지도 좀 현 단계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 당시에 보면 국가전략 최고 사령탑의 정보 부재, 그리고 중대한 판단 착오가 당시에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좀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체 민감한 사안이고 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드리기 어려운 사안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위 그런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엄정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파악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철 의원**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엄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의원** 결국 이번에 일어났던 이런 일은 국가전략 최고 사령탑에서 정보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판단을 틀리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판단 착오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무엇을 파헤칠 것인지, 무엇을 정비할 것인지는 나중에 할 것이지만 현 상황에 대한 판단 자체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정의 자체는 맞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심재철 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협상 창구도 없었고 직접 교섭도 못 했고, 국정원 그리고 또는 NSC에서 정보 수집이나 판단도 못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드러났던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타임지인데요,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심재철 의원** 신문 보도에 그때 두 군데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미처 못 봤습니다.

○**심재철 의원**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은 왜 웃고 있는가’라는 게 제목입니다.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레프티스트 내셔널리스트 프레지던트(leftist, nationalist president),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 민족주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25년 동안을 민주화운동부터 같이 해 온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라고 보는 견해는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다면 결국 오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오보인지의 여부는 제가 그 잡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판사로 활동하신 분이시고 사고의 가치관에 있어서 좌파적으로 규정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다면 결국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이구만요?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그 기사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기자가 뭐라고 써 놓았든지 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좌파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의원** 검토해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오

보 청구…… 오보에 대해서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보기에……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타임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그것이, 내용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정당성을 보는 것이지 타임지라는 잡지에 실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기사는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기사니까 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검토해 보고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가치가 없는 정도로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을 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심재철 의원 하찮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25년 동안 같이 일을 해 왔는데, 국가보안법에 한번 저축이 된 적이 있습니까, 반공법으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심재철 의원 내셔널리스트라는 부분은요?

○국무총리 이해찬 내셔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기에 내셔널리스트 아닌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애국심을 다 가지고 있지요.

○심재철 의원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은 이것이 명백한 왜곡 보도냐, 아니면 단순한 오보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네 가지로 유형 분류를 하여 대응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제가 과문해서 아직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 내가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총리에 부임한 지 지금 열흘도 안 된 사람인데 정부가 취한 조치 내용을 어떻게 지금 갑작스럽게 다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심재철 의원 정부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지시를 했던 사실은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따라서 이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글썄, 그것은 제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보겠다니까요.

○심재철 의원 대응을 할지 안 할지를 앞으로 판단을 하겠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심재철 의원 그렇다면 예전에 지시했던 것이 잘못된 지시네요? 잘못된 지시 내지는 정부 스스로 지시해 놓고 그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게 되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 기사 내용을 저는 심 의원님한테서 처음 들었는데 지금 문건도 확인을 안 해 보고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대응하겠다, 안 하겠다를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심재철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드러났고 특히 간첩이 민주 인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확인되었고, 역시 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라는 것도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느낌이기에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비겁하신 표현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겁한 표현이 아니고,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이 느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철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이강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래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출신 이강래 의원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2기가 출범했습니다. 경기 침체, 이라크 파병 문제, 김선일 씨 피살사건,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 등 수많은 국정 과제를 떠안고 출범하는 참여정부 2기 내각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여정부는 꼭 성공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공입니다. 참여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제반 현안들을 조기에 수습해서 국정 안정을 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민생 안정을 실현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 모두가 희망을 꿈꾸게 해야 합니다.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고맙습니다.

○**이강래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이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의정단상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입장이 바뀌니까 저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총리께서는 소신 있게, 그야말로 지금 많은 현안들을 당당하게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문제부터 질문할까 합니다.

지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강래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최근에는 대상 지역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착착 진행할 수밖에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당론으로 찬성했던 한나라당은 입장을 바꿔서 지금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또 일부 신문들이 여기에 가세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제기하고 그 쟁점들을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나라당, 일부 언론, 그리고 반대 단체,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연합을 형성해서 그야말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반대에 대한 여론이 지금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인식을 저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수도 반대론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대단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한 총리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행정수도는 하나의 사안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화, 수도권 과밀 해소, 이런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해 왔던 우리 사회의 지난날의 잘못된 과정을 바꾸는 큰 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어찌 보면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사실상으로 매우 중요한, 가운데 중심축을 이루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뤄져야만 국토의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사회의 여러 가지 규범이나 관행 이런 것이 지방으로 이전됨으로써 분권화도 이루어지고, 여기에 80개의 공공기관이 들어가고 160개의 공기업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전국 도시로 나누어지는, 대규모의 중앙집권화된 공공기관의 이

전사업까지 포함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그동안 수도권외의 과밀 억제에 위해서 해 왔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비해서 수도권을 금융의 중심지로, 또 물류의 중심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큰 정책 전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부분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기도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차단이 될 경우 큰 전체 흐름에 왜곡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신 강조어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래 의원 좋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취해 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작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통과 당시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당론으로 이 특별법을 바로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총선 당시에 충청권의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고 박근혜 대표께서는 충청권 전역을 돌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철석 같이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우리 정치문화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잘못된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사건이라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이 진 것을 인정치 않아서 발생했다고 그런다면 이번 신행정수도의 건설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 또한 똑같은 과거 행태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한나라당의 그야말로 이중적인 태도는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작년에 통과된 법이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제가 맡고 있는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4개 지역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나왔고, 곧 이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지를 결정하게 되고,

또 금년 상반기에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을 설정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막는, 이미 상당히 집행이 되고 있고 진도가 나간 상태에 정부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국회에서 다시 개폐해 주시지 않는 한 정부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해서라도 성실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래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이 사과한 부분은 작년 특별법을 통과할 당시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더라는 절차나 과정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이 법 무효를 선언했다는 국민적인 비난이나 특히나 충청권의 집중적인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똑같은 연설에서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린 이후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서 자신들의 당론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을 실제로는 교묘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라당이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켜서 결국은 2006년 지방선거, 특히 수도권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2007년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똑같은 연설에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본인들의 이러한 숨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런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모호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여기서 한나라당의 의도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당시 저도 그 표결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즘에 와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집행하는 데 큰 애로를 겪고 있고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래 의원** 좋습니다.

또 박근혜 대표는 같은 연설에서 국회에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위한 특위를 제안했는데,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려고 표결을 시도했었지만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강래 의원** 그런데 당시에 특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공론화도 거치고 특위를 통해서 제반 문제를 충분히 토론하자라고 했을 때는 부결시켜 놓고, 이제 법을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자신들의 입장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특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특위 이전에 분명히 정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폐기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위를 통해서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방해할 목적이라면 특위를 구성한다 해도 운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소모적인 싸움만 지속되어서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생의 정치는 결국은 실종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다른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취지와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래 의원**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입장을 분명히 해서 작년에……

(○**남경필 의원 의석에서 - 대정부질문 하세요. 왜 한나라당 얘기만 계속 하십니까?)**

지금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 경청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작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 열린우리당은 특위에 바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동 특위에서는 국회와 사법부의 이전 문제, 이전할 기관의 청사 처리 문제, 비용 문제 등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바로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반대운동을 추진하는 모임에서도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국민투표를 제안하게 되면 이것 그 자체가 헌법 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행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법을 폐기시키는 절차가 선행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총리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헌법 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 성격과 72조 규정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문제가 해당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완전한 결정은 아니지만 현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작년 11월 27일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송 결정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4명의 재판관 명의로 소수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해석하는 지침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지는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만을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도입하고 있고, 따라서 72조는 우리 헌법체계의 예외 조항이고, 확장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축소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위 결정문에서 헌법 72조의 국가안위의 개념에 관해서 볼 때 국가안위는 일반적으로 비상사태를 전제한 개념이라는 점, 우리 헌법은 국가안위의 개념을 헌법 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 비상사태나 그에 준하는 국가의 위기적 사항으로 협소하게 봐야 한다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국민투표에 대한 제한적·소극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민투표는 위헌 소지가 대단히 큰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 한나라당은 작년 2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시 정책위의장이셨던 이상배 의장께서, 2월 13일은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영일 사무총장께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민투표는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국민투표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현재의 이 복잡한 논란을 정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이강래 의원님께서 헌법 72조의 국민투표 대상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사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았더니 대개 1980년도에 개정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고 “중요정책”을 부칠 수 있도록 헌법에 되어 있었는데, 그걸 삭제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국가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책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정부가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안위’라고 하는 제한적 규정을 두어서 개헌한 바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국민투표의 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국회 자체의 폐기 없이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국가의 큰 체계가 동요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사안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래 의원** 준비한 것이 많습시다하는 시간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깨끗한 정치, 상생의 정치,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생의 정치는 17대 국회가 새로운 장을 열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생의 정치의 전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약속 이행이 이루어질 때 축적됩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은 여야의 약속이자 16대 국회의 국민적 약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라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나갈 때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부의장 김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남구를 출신 김기현 의원입니다.

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열망이 개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고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당은 달리하지만 선진 한국을 향한 변화와 개혁, 그것에 대한 기대를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정부 여당이 이러한 일을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한편으로는 해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정책 혼선이 더욱 가중되고 사회적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오로지 표를 얻고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새 정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불신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정치권, 행정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참여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표를 모아서 또다시 집권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런 내용이나 실속이 없이 이미지 정치, 이벤트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정치를 내세웠지만 알고 보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정을 앞두고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광부차관이 교수 임용 인사 청탁을 했고, 그 인사 청탁의 배후에는 장관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장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자기 내부의 일을 내부자가 조사한 다음

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정치니 새 정치니 하면서도 정부 여당이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특히 위헌에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정부질문 중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미경 의원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안사안마다 일회일비하면서 상황을 양극단으로 몰아가거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은 단연코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총리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정책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수도이전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도 이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저께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러한 발언은 상황을 양극단으로 몰아가거나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대통령이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극단으로 몰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의원** 지금 수도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촛불시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촛불시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 대규모 시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 대규모 연명을 한 무슨 행동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한 번 행정수도 반대를 위한 집회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 적은 있었지요.

○**김기현 의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정도의 상

황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낀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마치 행정수도로 옮겨가면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할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법이 집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지난 6월부터 많이 불거졌는데 지나고 보면 작년 이맘때에는 오히려 '왜 행정수도 부지를 빨리 결정하지 않느냐'고 모 언론 시설에서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신문이 이제 와서는 마치 조기에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는 양면성을 보시면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일부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차원의 말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불신임 운동,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운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혹은 퇴진이라고 혹시 총리께서는 그렇게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여론이라는 것은 자꾸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약간 반수 정도의 의견이 찬성을 하고 있고 반수 정도보다 좀 못 미치는 의견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 보아서는 그것이 무슨 불신임·퇴진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인의 신분인 사람은 특히 행동과 발언에 조심해야 된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다면 국가의 가장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도 발언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사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김기현 의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

○국무총리 이해찬 막연하게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말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고……

○김기현 의원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렸다면요.

○국무총리 이해찬 글썄요, 흥망성쇠라는 것도 당장 화급하게 떨어지느냐 10년 후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적시 되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판단을 할 수가……

○김기현 의원 그러면 10년 후에 흥망성쇠가 일어날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을 못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실적인 것들이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답변은 ‘국운이 걸렸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물론이지요.

○김기현 의원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해서 노 대통령이 2002년 12월 14일 TV연설에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 한 것을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리고 취임 후에 2004년 2월 24일에 방송기자클럽에서도 답변하시기를 ‘이후에도 찬반 논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런데 이러한 발언이 문제로 된 이후인 6월 18일자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필요성은 실효되었다’ 이렇게 밝혔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총리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동의합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다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국민투표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국민투표 사안이 되느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저는 그런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필요성이 실효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총리께서 대답하셨잖아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국민투표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는 데,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꼭 그렇게 배울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현 의원 아니, 방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이해찬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답변하셨는데 다른 취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작년 12월에 통과되었고 금년 1월 16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월 24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표현하셨거든요.

어떤 때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법이 제정된 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랬다는 말이지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말을 빼면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안 한다’ 이렇게 한 것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이 제정된 후에도 ‘국민투표 할 수 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국민투표가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법률상으로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국민투표에 꼭 부치려면 국회에서 그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해서 폐기를 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이런 사안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김기현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사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때는 ‘국민투표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니까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투표 안 한다’고 말을 뺐다는 말이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이미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제 기억으로는 그때 반대한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미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국민투표를 부치게 되면 입법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빚게 되기 때문에 우선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판단입니다.

다만 이것을 구태여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입법과정을 다시 밟아서 헌법까지 개정해서 부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기현 의원 제가 묻는 뜻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질문은 법 제정 이후에 대통령이 금년 2월 24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의견 표명을 했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런데 왜 6월에 와 가지고, 6월 후에는 갑자기 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앞에 2월에 말씀하신 것은 국민투표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신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대통령이 법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김기현 의원 그러면 대통령이 법을 잘못 알고, 헌법을 잘못 알고 그런 발언을 하신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법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잘못 아신 것은 아닐 것인데 그만큼 국민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의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 특히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뜻을 이상하게 해석해야 될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명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투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런데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앞뒤가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법을 잘 몰라서 아니라는 뜻이네요?

○국무총리 이해찬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투표까지도 모든 국민이 요구하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금년 6월에 ‘국운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이처럼 국운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 국가의 중요 정책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중요 정책이지요.

○김기현 의원 그리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안위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국운이라는 것은 국가의 운명, 흥망성쇠에 관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국운’하고 ‘안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요.

국운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일이야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안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될 만큼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은 흔히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발효될 정도로 긴박하면서도 국가의 비상상태에 준하는 그런 화급성, 중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지 않아요?

총리께서는 취임 후 10일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런데 열흘 동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대통령은 국무총리보다 훨씬 많은 보좌진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보좌진으로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런 대통령이 당선 후에 이전 문제에 관해서 큰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러한 발언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자세한 경위는 제가 당시 보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기현 의원 그 당시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당시 제가 보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솔직하게 그냥 사실은 그 당시에 국민투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싶어서 받을 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국민투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탄핵 국면을 치러 보셨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으로 말씀하신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 의원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머리를 써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이상한 사회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기현 의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국무총리 후보로 거명되기 훨씬 이전에 정동영, 김근태, 정동채 이 세 분이 장관 후보로 거명되고 있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김기현 의원 신문에 보도된 정도가 아니고 5월 23일자 보도인데 통일부장관에 정동영, 복지

부장관에 김근태, 문화부장관에 정동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알려졌고 김우식 비서실장이 직접 만나서 부탁하겠다고, 고 총리한테 가서 제청 부탁하겠다는 보도까지 났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상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 아니라고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제청 절차를 밟을 적에 대통령 인사보좌관에게……

○김기현 의원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청 절차를 밟을 적에 대통령 인사보좌관에게 제청할 인사 명단을 제가 3배수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제가 그것을 여쭙 본 것이 아니라 보도가 잘못된지를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3배수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제가 판단해보니까 그중에서 3인씩을 가져왔는데 어떤 경우는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벌써 제가……

○김기현 의원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쭙 볼 겁니다. 방금 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당시 보도는 잘못된 겁니다.

○김기현 의원 그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혹시 정정보도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아니, 그것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청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김기현 의원 지금 당사자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여쭙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여쭙 보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 당시의 보도는 제가 총리 신분이 아닐 때 보도했기 때문에 제가 정정보도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기현 의원 정부에서 그런 정정보도 청구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런데 이 신문의 내용은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신문 보도는, 당시 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그 3배수를 가져와 가지고 다른 분을 제청했으면 그 보도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의원 혹시 다른 분을 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다른 분을 제청할 것을 깊이 검토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국무총리 이해찬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취지를, 하나하나 인사파일을 보고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추천된, 제청한 세 사람만 한 분들이 있지를 않아서 세 분을 제청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기현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내놓고 “사실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 났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3배수로 추천을 해 오라고 해서 3배수로 추천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덕적 자질, 국무위원으로서의 임할 자세, 부처를 끌어갈 능력, 그리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맡고 있는 세 부서의 성격상 제가,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누구한테 쉽게 무슨 제청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검토해 본 결과 적절치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세 분을 제 이름으로 서면으로 제청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말한 것을 국민들은 그것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할 만큼 국민의 수준이 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의 첫 조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이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동이나 무리가 있다면 단호히 엄벌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제2기 의문사위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런데 오전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지 못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발표 내용을……

○국무총리 이해찬 그 발표문안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발표 내용은 신문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그리고 오늘 그것을 틀림없이 물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을 받았으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어제 그런 결정이 난 모양인데, 제가 아침부터 여기 와서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묻지 않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서류를, 오늘 아침부터 제가 공관에서 8시에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의문사위원회에서 난 결정문을 지금 입수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이분들이 단식투쟁을 했던 행위는 의문사법이 정한 민주화운동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제가 16대 국회 때부터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법의 취지는 3선 개헌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지금 아까 말한 장기 좌익수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닙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잘못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기현 의원 조선일보 신문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7월 1일자 신문인데 크게 이렇게 났습니다. “이 총리, ‘요즘 노동쟁의는 과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발언한 적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지금 그렇다면 혹시 강성 노조가 현재의 비정규직 양산, 이런 문제에 관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많은 견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강성 노조가……

○김기현 의원 비정규직 양산의……

○국무총리 이해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고요?

○김기현 의원 예.

○국무총리 이해찬 꼭 그렇게 직결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근로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아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노동쟁의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쟁의를 보면 대개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의 이익분쟁들을 많이 하는 쟁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근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몇 군데의 쟁의는 위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임금 수준이라든가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한 노조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본인 자신들만의 임금인상을 위해서 위법을 포함한 쟁의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현 의원** 그리고 그날 저희 당 당사를 방문해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박 전 대통령의 한 쪽 측면을 보고 맹렬히 비판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의 경제 성과 없이 이렇게 못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단순한 덕담의 수준입니까, 진심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표를 뽑고 저는 실제로 유신 날 때부터 80년도까지 거의 민주화운동을 아주 치열하게 한 사람이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또 감옥살이 하고, 그래서 유신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역사적으로 제가 해야 할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90년대 중반 넘어서 제가 의정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가를 낚은 시각에서 보는 경험을 갖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여러 차례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을 가지고 성장해 온 이른바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런 사실 자체를 저의 지금까지 판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을 박근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현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총리의 진심에 의해서 판단하건대 한나라당의 기본이, 그 기초가 된 종전의 그런 전력들이 상당히 경제성장이 라든지 이렇게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많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군요?

○**국무총리 이해찬** 한나라당이요?

(장내 웃음)

○**김기현 의원** 한나라당의 기본, 근본이 되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한나라당이 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김기현 의원** 아니라고요(웃음)?

○**국무총리 이해찬** 당시에 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개발시대를 이끌어 온 세력들은 지금은 이제 다 은퇴를 하셔서 가지고 지금은 아주……

저는 13대까지는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 그 후에 한 나라당은 개발연대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보다는 다른 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뿌리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기현 의원** 한나라당의 뿌리 중의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한나라당의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여쭙어 보겠습니다.

헌법 제86조제2항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김기현 의원** 이 규정은 행정각부의 통할권은 국무총리가 가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행정각부에 대해서 직접 통할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명해서 통할한다 이런 뜻이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김기현 의원** 그렇다면 대통령이 장관을 겸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

○**김기현 의원** 대통령이 장관을 겸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글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 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겸한 예를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 헌법 조항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주고 대통령이 직접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독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김기현 의원** 그러면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타당한 이유는 아

닌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전혀 이유가 될 수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대통령의 개인적인 독재 예방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대 헌법의 기본,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 견제·균형, 그리고 민주주의적이고 기능적인 역할 분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 국무총리의 기능적인 역할은 뭐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국무총리는 지금 말씀처럼 내각을 총괄하고 또 부처 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대통령이 독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지위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거기에 본질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 본질을 묻지 않았습시다. 그런 지위 역할도 갖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좀 국무총리 역할의 본질에는 적합하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견제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권력이 분산되고 상호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에서의 견제 장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 개인을 견제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현 의원**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견제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일반적인 권력분립과 균형에서의 견제라는 말씀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비처 운영 계획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대통령 직속 부방위 산하에 둔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이것은 헌법에 정해진 정부조직 원리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헌법재판소에서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적법한 요건으로 법제화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러면 장관의 견해는 고비처를 만들더라도…… 우선 만드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동의 여부는 법무부에서 의사 표현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방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부처 문제이기 때문 예요.

○**김기현 의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김기현 의원**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의논하게 되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나중에 법안이 완성되면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때는 의견을 표명해야 되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 이전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반부패관계기관회의에서 부방위에서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내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나중에 의견은 어떻게 표명하실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법안이 완성되는 것을 본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과정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부처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결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 경솔한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러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안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속 부방위 산하에 둔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저는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산하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권한, 어느 정도의 절차로 둘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법률적 요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리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

을 기울여서 협조하고 의견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김기현 의원** 고비처라는 것은 말이지요, 맹수가 사냥할 때 발톱 숨기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덮칩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24시간 자신이 필요한 상대방을 감시하다가 어느 순간에 덮치도록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김기현 의원** 예, 좋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빅브라더라고 하는 가상의 지도자가 국가의 모든 사상을 통제하면서 집집마다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것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사상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회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비처라는 텔레스크린이 이 나라의 지도층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사태는 결코 안 된다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김기현 의원** 오전에 나왔던 것처럼 노 대통령은 인사청탁 걸리면 패가망신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지요.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취임 전에 그런 언급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기현 의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면 형법 123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김기현 의원** 만약 문화관광부장관이 정진수 교수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인사청탁에 개입되어 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범죄사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권남용죄의 요건이 까다로워서 문화관광부차관이 특정 대학의 교수 임용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사안은 그것이 아닌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 조사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일단 요건이 그렇다는 말씀은 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문화관광부차관의 업무와 교수 임용에 대해서 권한이 있느냐,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따져 봐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그러면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사안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느냐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리상 해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사실 관계가 판명되기 전에는 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대학교수한테 청탁을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수 임용 문제가 법무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차관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 이 사건에 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내부적 조사만 했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여론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사안이라면 신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믿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법무부장관의 임무는 뭔가 문제

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사하도록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당시의 원칙입니다만, 이미 청와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 여부에 혐의를 두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사해 보기도 전에 일단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현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또 정책이 같거나 다를 때 떠나서 헌법을 수호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책무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본 의원은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 참여정부는 많은 헌법 위반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있으나마나한 국가,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헌 옷처럼 버려지는 ‘헌 법’이 아니라 법헌(憲)자 ‘헌법’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강력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제17대 국회는 선거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국회가 제2의 제헌국회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함께 뜻과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

가입니다만,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총리는 대독 총리, 방탄 총리, 얼굴마담 총리 등으로 불렸던 것처럼 제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바람직한 총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총리가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도록 헌법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리 역할을 하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각을 통할하기 위해서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조정을 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내각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는 상당히 민주화된 다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에 대해서 정책을 잘 설명해서 동의를 구하는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의 정무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일관되고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여당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야당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야당과의 상생의 정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협조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전에 제가 야당을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각에서는 이제 중요 정책에 대해 야당에도 정책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동의를 구하도록 제가 이미 장관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아마 장관님들이 설명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고, 또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합의가 되어야 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지만, 다만 저희 장관님들이 너무 일에 바빠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

겠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 180명의 의원님들이 새로 등원을 하셨기 때문에 왕성한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리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국민 분열의 정치를 국민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현 정치권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빈부 간, 지역 간, 노사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은 그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의 정책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총리를 중심으로 국민 갈등 해소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는 정략적 논쟁은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앞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사회가 아주 민주화되고 개방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성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빈부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설득과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잘 밟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절차를 잘 밟기 위해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해 나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17대 국회가 우리 헌정사상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깨끗한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히 선거혁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금권·관권 선거는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특히 관권선거는 이미 극복되어 왔기 때문에 금권선거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느꼈던 절망감은, 왜 선거 때만 되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공권력이 그리고 그 주무부서인 선관위는 이렇게 무력해지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관위와 검·경이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리가 있었지만,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해 큰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고 치하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기관들, 특히 기관에 속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무엇보다도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내걸었던 특진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였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특진 및 포상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돈 안 쓰는 선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특진제도를 강화, 확대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원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정치풍토, 선거풍토를 만든 결정적인 것은 민간 부문에서는 역시 신고포상금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고 금품 수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50배 이상 부과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기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역시 특진제도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 특별승진한 사람은 전체가 33명입니다. 이 중에서 경감이 2명, 경위 15명, 경사 14명, 경장 2명, 이렇게 33명의 경찰이 특별승진을 했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28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가 아닌 매우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제도를 더 다듬어서 시행을 함으로써 모든 선거에 더 확대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구 조정이 많

이 있어서 인사 T/O가 있어서 특진이 용이했는데 다음에는 꼭 차면 특진을 시키기 어려울 것이 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33명에게 연봉 5000만 원씩 해서 30년씩 준다고 그래도 수백억입니다만, 여기서 얻어지는 우리 사회·국가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남는 자리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한 배려로 T/O를 만들어서라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정부 내 T/O의 탄력성을 감안해서 이 제도가 결코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포상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유권자들이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나한테 밥 사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밥 잘못 얻어먹으면 50배 물어내야 된다, 또 후보자 진영도 50배 포상을 노린 신고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큰 문제를 일으킨 불량 만두소 사건을 보더라도 그 회사의 노동자들이나 납품, 임가공, 또는 판매 등을 맡고 있는 관련 업자, 또 그 회사의 이웃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고발정신을 발휘해서 일찍부터 방지할 수 있었다면 큰 개선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포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포상제도를 다방면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불법 오폐수 배출이나 미성년자 학대, 퇴폐 향락사업 등 모든 반사회적 행위의 근절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상제도를 활성화해서 폐쇄적 봉건적 윤리의 식으로 말미암아 타기시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회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우리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핵심 내용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과 민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관계,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모두가 그렇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으로, 일방적 지시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조직과 기능들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정부 혁신이고 행정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고 김선일 씨 납치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정부 기능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조직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수평적 정책조정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단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또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원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선일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위기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정보관리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가 충분히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이번 계기에서 본 것처럼 현재의 제도로는 중요한 시기에 다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정부 내에서도 많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수용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또 행정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윤성식 감사원장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일들을 감사원이 주도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만, 각 정당들의 권위주의적이고 정략적인 대응으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기능은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적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효율성 위주의 감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모

든 사업이 100% 완료되고 성과목표도 100% 달성되어야 하는 숫자놀음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열 가지 성과는 무시하고 한 가지 실수를 적발하고 징계하는 식의 감사는 결국 모든 공직에서 창의적 선도자를 몰아내고 보신주의자들만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개혁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우리나라 감사는 헌법상 주요 기능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각 부처의 집행예산에 대한 회계검사, 그다음에 감찰 기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회계검사 기능은 행정이 많이 투명해지고 그래서 좀 필요성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기능은 전반적으로 지금 성과주의에 기초하는 업무평가제도로 전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전환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은 각 부서에 자체 감찰 기능도 많이 강화되어 있고 옛날에 비해서 투명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일정 수준의 감찰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산 기능은 고유의 기능이기에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이 대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평가 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평가를 성과주의적 관점으로 하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 기능이 지금보다는 더 정부의 업무 수행 능력을 육성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정부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주체인 공직사회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인사개혁안으로 국가 인사 기능을 통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다양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진입·퇴출 장벽이 두터운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공무원들, 절대다수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진국은 전체 인건비의 3% 이상을 교육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 비해 정

부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입 시간과 예산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일류행정의 목표는 헛된 꿈일 뿐입니다.

총리는 올해 공무원 교육예산이 얼마인지, 즉 인건비의 몇 %인지, 그리고 내년 교육예산을 얼마로 증액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2003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인건비 9조 6000억 원 대비 0.2%인 15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진국의 3%에 비하면 아주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고, 내년도는 그보다는 약간 상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현재 집행 중인데 인건비 10조 2000억에 대해서 0.24% 정도로 약간 올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변화가 빠르고 또 대국민 설득,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그 정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해를 잘하고 스스로 먼저 혁신하면서 발전해 나가야만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 40시간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재교육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의 지원을 더 증가를 해서 많은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내년도 목표를 얘기 안 하셨는데 0.5%만 가면 사사오입해서 1%라고 어디 남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0.5%를 목표로 한번 설정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교육을 하려면 자체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고 뭐 다른 해외연수교육까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더 잘 해 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소모성 경비로 이것이 나가 버리면 예산은 집행하고 효과는 없는, 건축물 짓는 것처럼 가시적인 것은 점검이 쉬운데 이런 경우는 또 점검이 안 될 수도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원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했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잠깐 행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천시장으로 6년간 일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호소가와 전 일본 총리의 주장에 절실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으로의 권한과 재원의 이양은 미진합니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서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추진 중인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지난 6월 10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법제처 심사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거치게 되면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70개 법률, 357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양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팔 없는 찌뽕입니다.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교육과 치안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여성과 청소년이 마음 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시민들이 시·도지사를 뽑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을 때는 이러한 일을 잘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라고 뽑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이러한 일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자치경찰제도는 그동안 상당 기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내부에도 혁신단을 만들어서 죽 연구를 해왔고, 그다음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하고 경

찰청하고 함께 대책팀을 지금 만들어서 죽 연구를 해 오고 현재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계속해서 하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법 경찰권을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부여하는 것은 다 원하는 일이지는 합시다마는, 막상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을 때는 자치단체장들이 관내 치안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와 권한 문제가 병행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을 적극 환영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또 주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혜영 의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참여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경찰은 전체 범죄사건 약 176만여 건의 93%를 실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은 오직 검사의 지휘만을 받아서 수사하도록 해서 현실의 수사 실무와 완전히 동떨어진 제도가 되었습니다. 실제 검사가 모든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행자부장관이 한두 가지 더 답변하신 뒤에 들어가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국민의 인권 보장, 편의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수사권 독립 문제뿐만 아니고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주관 부처가 법무부, 검찰, 이렇게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확실히 서로 신뢰를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두 기관에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또 최근 상당 기간 동안 신뢰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좀더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일선 단체장들이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자치를 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많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도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저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국익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의원** 많은 단체장들이 부패 문제로 구속되어서 업무가 마비되고 또는 개인적인 불행을 겪고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이것 때문에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단체장들은 선거 때 우리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된 탓입니다. 막대한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다 보니 부패의 사슬에 얽히게 되기가 쉽습니다. 선거 때만이라도 후원회를 허용해서 깨끗한 돈으로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자치단체장 후원 문제는 그동안 죽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협의체, 또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 결과 2000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냈다가 이것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독으로 논의할 제도라기보다는, 이것이 또 선거공영제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프랑스 일본 미국은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반면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단체장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지 저희가 좀더 의견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이것은 행정자치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아까 질문하신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고비처 신설 문제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분명치 않게 명제화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수사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필요한 만큼 개선할 것이냐 하는 좀 거국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역사적인 배경이나 필요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머리에 해당한다면 경찰은 손발과 몸에 해당해서 직접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이 지휘 감독을 통해서 수사의 적정성을 보장해 주고 기소를 맡는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 정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우선은 이 시스템의 정상화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검찰의 내부 개혁의 목표도 직접수사 기능을 너무 확대해 왔기 때문에 생긴 검찰의 폐단을 지양하고 지휘 감독과 기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에 맞춰서 경찰의 수사 기능 강화를 같이 연구해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행자부장관께서 두 기관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머리와 손발의 관계에서 유기적인 결합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검에서도 검·경협의회 같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체제로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거국적 관점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1970년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30%가 채 못 됐습니다. 30년 만에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천안시나 일산 신도시만 한 35만의 인구가 수도권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1977년 2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진 배경을 “서울은 방위 전략상 취약하고 무질서한 과밀성장으로 도시 문제 심화 및 타 지역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서 행정수도의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수도권 인구가 얼마인지 총리께서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500만 좀 넘지 않았나요?

○원혜영 의원 지금은 얼마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수도권 다 합치면 지금 2300만쯤 될 것입니다.

○원혜영 의원 76년도 현재 서울이 700만이 안되는 688만, 수도권이 1091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1000만이 넘었고 수도권은 2300만을 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밝힐 때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한 바가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비공개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거공약이나 공개적인 정책으로 국민들 합의하에 추진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선거공약으로 걸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근거입법을 마련하고,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박 대통령 당시에요?

○원혜영 의원 예.

○국무총리 이해찬 당시에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수도권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년 분당 신도시 규모의 600만 평 택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비용은 매년 3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확정,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지금도 여러 곳에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신행정수도를 개발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치하면 2030년도 수도권의 인구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계속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수도권에 신도시들을 건설하는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도시 건설비용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수도권에 약 2300만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계신데 평균 1년에 보통 30만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뒤인 2030년이면 단순증가로 보면 한 600만까지 증가해서 2900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른 요인까지 합치면 수도권을 연구하는 견해를 들어 보면 대개 2550만, 2600만까지는 이대로 가면 육박할 것으로 전망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는 약 30만 인구를…… 늘 필요한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만 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늘 공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대체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 합쳐서 약 40조가 넘는 막대한 투자를 현재도 해야만이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도권은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있고 지금 46% 정도의 인구집중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수도권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통혼잡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혼잡비용도 더 정확하게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10조가 넘을 것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처리 비용도 수도권의 경우는 처리할 부지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한 4조 원이 넘는 환경 처리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방치해 가지고는 수도권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사업적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경쟁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가는 그런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밀해소를, 더 이상 추가적인 과밀을 일차적으로 막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현재의 인구까지도 좀 줄여야 되는,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투자비, 재정투자 11조와 민간 대체투자 34조 해서 45조는 현재 수도권에서 매년 투자하는 40조가 넘는 투자비용에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행정수도의 투자비용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도권의 투자비용을 대체 투자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혜영 의원 수도권 기업 유치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불필요한 각종 규제, 이 문제입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규제들은 전면 철폐되고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경제금융 전문도시로, 인천은 동북아 첨단물류 중심 도시로, 경기도는 IT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는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은 신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입니다.

17대 국회는 민주주의와 진보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정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복지민주사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는 첫째, 온 국민의 여망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국회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1, 2당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한 달간이나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는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교섭단체 간의 밀실야합식의 국회운영 행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 제시 기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의 정치참여와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국민들의 여망인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독자적인 기소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구로 신설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통로이자 현장정치 실현의 중요한 제도인 지구당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7대 국회의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제2차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발족과 상시 활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 정치사상의 자유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고대하며 남북 간 장성급회담과 외무장관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합의되고 단행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섬멸해야 할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니라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인권 탄압국이라는 국제적인 오명의 빌미를 주며 남북교류에 관한 기본법상 현실성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입니다. 대체입법이나 개정이 아닌 즉시 폐지되어야 할 구시대적 악법일 따름입니다.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집시법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온 반인권법 또한 조속히 철폐·개정해야 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을 희망하는 강제 전향 장기수들의 북송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셋째,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휩쓰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심도 깊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의 기준은 생명·인권·평등의 가치입니다. 17대 국회는 특혜, 독점, 불공정으로 점철된 재벌을 개혁하고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국가 간 각종 통상협상은 안보협상만큼 중요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국제통상협상 과정은 제도적 투명성과 국민적 검증을 토대로 진행되어 불평등한 협상 체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의를 위해 모든 전

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을 꿈꾸는 대한민국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 이라크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추가 파병은 침략전쟁에 대한 동조입니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추가 파병 중단과 서회·제마 부대의 철수도 단행되어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고 김선일 씨 피랍·살해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억제를 위한 첫걸음은 군축입니다.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과 이와 연동된 연합전력증강계획은 남북한 군축과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한미동맹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한미동맹은 재구축되어야 합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조속한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그리고 국회 모든 문서에 보면 권영길 의원의 이름은 비교섭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을 유권자는 민주노동당 후보를 찍어 주었지 비교섭단체의 후보를 찍어 주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해찬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관계 장관도 출석을 시켜서 물어야 됩니다마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동당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한 사람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한미동맹 강화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여러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권영길 의원 하나임에는 틀림없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권영길 의원 지난 6월 16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입니다. 9·11테러진상조사위원회의 이라크전쟁 관련 공식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이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는 아직 발견 못 했고 후세인 정권의 알카에다에 대한 후원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였습니

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 명분은 미국 의회에서조차 거짓으로 밝혀졌고, 미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말씀하신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미국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것을 외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세세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시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비판을 받고 있고, 부시 대통령의 전쟁의 명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사실이라면?

○국무총리 이해찬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이라크전쟁이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을 이유로 우리 청년들을 이라크로 파병하려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행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보복을 당하거나 그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미 관계는 그렇게 보복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오랜 동맹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권영길 의원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보복하거나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영길 의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보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영길 의원 알겠습니다.

한미동맹으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총리는 한미동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한미동맹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6·25 전쟁 전후해서 우리가 대사회주의 냉전체제하에서부터 오랫동안, 50년 동안 가져온 관계인데 이제 와서는 여러 가지,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미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권영길 의원** 분명한 사실은 한미동맹의 본질은 한미 간 군사적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미동맹은 이라크 파병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작전계획,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과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변화 등 한국의 안보전략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군사동맹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국무총리 이해찬** 방위조약은 군사조약입니다.

○**권영길 의원**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이라면 반드시 위협의 실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권영길 의원** 총리께서는 한미동맹이 상정하고 있는 위협의 실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위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딱히 방위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에 설정된 방위조약은 당시는 냉전체제였기 때문에 냉전체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것을 일단 위협의 실체로 설정했고, 냉전체제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 기초하에서 방위조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한미동맹은,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에 체결되었습니다. 분명히 북한을 실체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지금 냉전이 끝난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면 총리께서는 북한을 위협의 실체로 안 보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북한도 위협의 실체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은 당시 방위조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위협의 실체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한 민족으로서의

역사를 화해의 역사로 만들어 나가야 할 공존 교류의 대상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미동맹의 위협의 실체는 일반적으로 북한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북한만을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 의원** 총리께서는 북한만은 아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누구라도 한반도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한미군사동맹의 위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렇다면 한미동맹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럿 중의 하나다, 그것을 상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상 최대의 적은 북한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도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북한과 핵문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현시점에서 여전히 위협의 실체라고 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현재…… 우리가 지금 휴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을 가지고 있고, 장성급 회담이 한 번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위협의 실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협의 실체임과 동시에 우리가 화해, 공존, 교류해야 할 또 하나의 대상,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한 부분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길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총리께서는 남북한 간 국방비 지출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국가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평가하는 연구소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재 방위전력을 비교적으로 수치적으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길 의원** 현재의 국방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남한 국방비가 북한보다 10배가량 많습니다. 우리 국방부 발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보다 3배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재래식 전력은 주한미군의 전력을 빼더라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동안에는 공격력에 비해서 우리의 억지력이 매우 낮다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도 국방력을 상당히 강화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억지력이 이제는 공격력과 버금갈 정도로 강해졌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도 또한 본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현재로 보서는 전에 비해서는 우리의 억지력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 의원** 비대칭무기를 빼면 재래식무기로 비교할 때 남한이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현재의 조영길 국방장관이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과의 군비경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극심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이미 도발할 의지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에서 사실상의 주적으로 규정된 북한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주적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군사 억지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강, 강화됐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북한의 핵문제가 있는 한 일상적인 억지력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의미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지금 위협의 실체로 인정하고 때로는 주적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완전히 비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북한의 핵이 완

전히 폐기가 돼서 그럼으로써 북한이 개방사회로 전환이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된 뒤에는 지금 우리가 좀더 탄력적으로 응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비대칭무기, 즉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이라든지 화생물무기를 제외한다면 재래식무기는 월등히 앞서고,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 위에서는 북한이 위협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권영길 의원** 아니, 그러면 북한을 위협의 실체로 인정하고 총리께서도 여전히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위협의 실체로서……

○**권영길 의원**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둘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도양단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장성급 회담을 할 정도로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남쪽에서는 필요로 할 만큼 옛날과 같은 주적의 개념은 조금씩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가 다른 치명적으로 위험한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협의 실체로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한미동맹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을 실체적 위협적으로 간주하는 냉전적 안보 개념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의원**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렇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일 때 저희 당의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방문을 해서 북한의 여러 군사 분야에 종사하는 요인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장시간 얘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이미 재침 의지를 결여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또한 남북한은 외무장관 및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성급 회담, 정상회담과 경제문화협력추진 등 상당한 수준의 평화협력적 관계를 진행 중입니다. 현실은 평화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여전히 냉전적 안보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전면적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 또한 이러한 사실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것입니다. 주적 개념의 변화와 함께 한미동맹 또한 전면적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한을 위협의 실체가 아니다, 출발했던 대로 1953년에 제정됐던 한미상호방위조약 그것만이 아니다 하면 이미 한미동맹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보완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제가 보기에 결국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수정 보완 가능성은 대단히 폭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은 저희가 북한과의 화해·교류·평화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대단히 예의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6자회담의 핵심은 북한 핵문제입니다. 한미동맹도 앞으로 그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총리께서도 핵무기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가 있다는 증거를 정부는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우리 정부가 지금……

○권영길 의원 증거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우리 정부가요?

○권영길 의원 예.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권영길 의원 갖고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우리는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미

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주로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정보수집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정보공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미국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킨 주원인이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를 가지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북한이, 물론 북한이 스스로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 문제는 금방 그렇게 쉽게 있다, 없다가 확인되고 종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증명이 되면, 증명이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의 성격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장 중심은 미국입니다. 그렇지요?

총리께서는 오늘 정치적으로 위협의 실체가 북한만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북한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이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즉 미군의 감축이 아니라 미군을 재배치시켰습니다. 2002년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으로 인해 우리는 이라크 파병이라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막대한 군사비를 낭비해 왔습니다.

과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온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고통과 희생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비이성적 레드 콤플렉스는 사회감시를 강화하면서 공정한 분배와 사회정의에 대한 권리 요구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철저히 탄압하면서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7,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에 고 통당한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북한이 남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동반자적 관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실체적 위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미방위조약이 유일하게 북한만을 가지고 설정한 방위조약은 아닌 것이고요, 또 그런 점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라든가 고농축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정보와 미국 정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북쪽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북한의 핵무기 부분이 폐기돼야만 아까 말씀드린 한미방위조약이라든가 한미동맹 관계도 보다 새로운 사회에 맞는 변화되고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의 성격은 이미 미국이 바꾸었습니다. 상황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 김덕규** 다음은 문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쁘신 정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부평갑에서 당선된 문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7대 개원 초에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국회는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해찬 신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행정부의 의지와 각오를 밝히는 자리이고 향후 대한민국의

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먼저 통일부장관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조속한 통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 이행을 이끌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장관급 회담 그리고 여러 계기를 통해서 답방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결심해야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여러 차례 답방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마지막 부분에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중한 초청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합의·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용천 참사를 계기로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가고 획기적인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동안 추진한 과정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최근 일부 언론에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 그 과정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의 성사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갈 생각입니다.

○**문병호 의원** 향후 햇볕정책의 추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로서 북한에 파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것 역시 일부에 그런 보

도가 있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사로 가시도록 하거나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한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병호 의원** 예, 됐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약칭 고비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대부분 기업과의 유착 관계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기업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면 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상승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에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비처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관은 고비처 신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신설한다면 어떤 체제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고비처 신설 문제는 부방위에서 제안하고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토론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특별히 신설 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안의 성사 과정에서 법 제도에 부합되도록, 요건이 잘 정비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장관으로서 할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대표가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고비처의 신설과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서 어떤 기관이 설치되고 어떤 체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법무부 자신도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강금실** 저희 법무부와 법무부 산하 검찰이 반부패 문제나 비리에서 가장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부처 나름대로의 과제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현재 부방위에서 제안된 고비처 신설과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논의에 한

해서는 법무부가 별도의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병호 의원** 장관께서는 과거 및 현재의 우리나라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제 개인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반부패지수에서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반부패 문제만큼은 법무부, 검찰뿐 아니라 참여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현재 제가 알기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50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패 척결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와 검찰이 과연 그동안에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원년에 검찰 개혁이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반성적 관점에서 제도 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1년 5개월가량 흘렀는데, 법무부와 검찰에서 과연 부패 척결을 위해서, 참여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제도에 앞서서 작년 1년 중 가장 큰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는 대선자금 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들이나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실현되었습니다. 그 수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해서 수십 명의 정치인과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사만큼은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검찰 내부나 사회에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러한 관행이 검찰 내부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혁을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이 민

주화되고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인사제도라거나 조직 개편에서 민주화를 꾀하고, 검사들의 직정한 업무 실현을 평가하고, 또 수사 관행상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인권수사준칙을 설정하는 등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글썄, 장관께서는 그렇게 수행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참여정부 들어와서 검찰이 대선 수사를 상당한 정도로 잘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 대통령과 측근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은 대선자금 수사와 측근 비리 수사에 대해선 상당한 정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사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의지대로 검찰권을 독립시켜 주었더니 검찰이 비교적 상당히 좋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수십 년 동안에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는데 작년 1년 동안 잠깐 신뢰를 회복했다고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 없이 말로만 “앞으로 잘하겠다.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믿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검찰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기소 단계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감찰위원회를 강화해서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을 왜 이제야 내놓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의견은 정부와 여당에서 고비치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강금실** 의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 지적과 같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검찰의 문제는 50년 동안 쌓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당장에 성과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대선자금 수사를 말씀드린 것은 50년 동안 불신을 받는 것이 쌓여 있던 기관이 1년 만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저도 상당히 놀랄 정도의 성과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1년 동안의 노력, 1년 동안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쌓인 만큼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실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검찰심사회 제도는 2기 정책위원회에서 제기된 과제이지만 작년에 법무부와 검찰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낸 성과는 10개가 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별로 관심들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것이 검찰인사권의 공정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이미 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를 해서 두 번의 인사에 반영을 했고,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계급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직급제가 모두 폐지됐고, 그런 상당한 민주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의 개선입니다. 이제까지 상명하복 관계, 계급적 관계에서 명령과 복종이 강요됐기 때문에 개개의 검사들이 자율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는다면 동일체 원칙을 개선해서 민주적인 지휘·감독 관계에만 복종할 것이고 그 이상의 명령·복종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 검찰 민주화의 과제입니다.

물론 1년 동안의 성과들은 아직은 매우 기초 작업들에 불과하고 아직 큰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검찰 개혁을 1년 만에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좀더 길게 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보면서 질책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검찰의 개혁 방안을 내놓은 시점이 조금 빨랐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고비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검찰에서 개혁 방안을 내놓고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고맙습니다.

○**문병호 의원**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 사실 작년에 대선자금 수사나 측근비리 수사가 나름대로 성과를 낸 수사가 된 이유가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 본 의원은 특검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전에는 검찰이 경쟁할 만한 기구가 없었고 검찰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단서가 있더라도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축소 왜곡 수사의 문제점이 지적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도입됨으로써 검찰이 잘못하면 바로 특검이 발동되어서 검찰의 문제점과 소극적인 수사 태도가 바로 지적되기 때문에 검찰이 바야흐로 분발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비처의 신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비처가 신설되고 검찰과 같이 양립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를 촉발할 수 있고 철저한 부정부패 발본색원의 수사를 촉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고비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부방위에서 현실적인 안을 제안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서 거론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장관께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하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권력기관화가 되고 그 권력기관에 대해서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비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검찰을 보면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현재의 검찰이 수사권과 지휘·감독·기소를 스스로 하는 인지 수사 부서에서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실패한 부분을 고비처라는 새로운 기구에서 또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스스로 실패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것은 수사와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기능과 기소를 가능한 한 분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기관에 집중되는 권력을 상호 분리시키고, 내부적으로든 기관 간이든 상호 견제시키는 것만이 건전하게 국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국가가 삼권분립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구가 분할되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검찰권은 상당히 비대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의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검사 1인당 한 달 처리 건수가 한 400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밖에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수사 지휘·감독 부서인 형사부의 업무가 지금 문의원님 지적처럼 엄청난 업무량 과다에 시달리고 있고, 검찰에 대한 비난은 주로 직접 수사하는 인지 부서에 대한 비난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면서 형사부 기능 강화 쪽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 검찰도 현재 업무량도 많고 인원도 적고 한데 있는 권한을 갖고 자꾸 감싸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일정 권한을 배분해 줌으로써 자기의 역량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애깁니다. 그래서 검찰도 일반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검찰은 특수수사 또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이런 중요한 사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이 검찰에서 일찍이 제시했다라면 아마 고비처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께서는 방금 본 의원이 말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강금실** 지금 문 의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문제는 이미 작년에 제기 오기 전…… 이미 온 이후부터 계속 내부 토론이

되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검사장 워크숍에서도 고비처 신설 문제가 나오기 전에 직접 수사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금 문 의 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용어로서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미 그 반성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작년부터 개혁 논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겠습니다.

안풍사건에 관해서 물겠습니다.

1000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안풍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문제의 자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차체에 비리 척결 차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 자금 부분이 물적 증거인 계좌 추적이거나 인출 관계에서는 안기부 예산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급자기 거액이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2심의 결과가 지금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일단 받아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조사 문제는 항소심에서 발언이 나온 이후에 법원에서 직접 증거 조사를 하시고 검찰에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은 일단 상고심을 받아 본 후에, 또 상고심 진행 중에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돈의 성격이 문제인데요, 이것이 정치자금이라고 그러면 공소시효도 지났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만 만약에 당선 후에 받은 당선 축하금 또는 취임 후인 재직 중 받은 돈이라면 과거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예를 보듯이 그 돈은 특가법상 뇌물에 해당될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선 축하금으로 받았거나 취임 후 재직 중에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특가법상 뇌물로 의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병호 의원** 지금 현재 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중요한 수사 단서라고 봅니다. 검찰은 중요한 수

사 단서가 포착됐을 때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법원에서 나온 2심 판결을 중요한 수사 단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아니고 물적 증거에 의해서는 안기부 예산이라고 보고서 기소한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1심도 그와 같이 판단했는데 2심이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문병호 의원** 그러면 만약 대법원이 '1000억대의 돈이 안기부 자금이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돈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수사에 착수하실 계획이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 부분은 최종 지휘·감독자인 제가 지금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상고심 진행과 기록 검토를 통해서 검찰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병호 의원** 한 가지만 물겠습니다.

국민의 주요한 기본권인 인권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소 전 인신 구속 사례는 일본이나 독일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6~8배에 이릅니다. 지금 각 지역의 구치소에 구속자가 넘쳐가지고 구치소 운영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사의 편의상 또는 관행상 인신 구속이 남발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법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불필요한 인신 구속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강금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구속률이 2004년 5월 현재 3.4%이고, 일본이 2002년 구속률이 8.7%이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구속수사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은 작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담긴 내용이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하고, 피의자일 때도 국선변호제도를 보장하고, 영장의 필요적 실질심사를 전면화하는 등 구속수사의 폐단을 방

지하기 위한 인권 보장 장치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권 수사준칙의 실행이나 대검에서 시작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들을 제시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실제로 나타나는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지휘 감독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장관께서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인신구속권을 누가 갖느냐가 그 기관의 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으로 보면 법원의 법관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현행 우리 수사 실무를 보면 검사가 실질적인 구속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속권을 법관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영장청구권을 통한 인신구속권을 법원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검찰 내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강금실** 법 제도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법절차 보장 원리에 의해서 헌법 제12조가 영장의 청구권, 인신구속에 관한 청구권은 검사한테 주고 있고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는 이제까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검사가 영장청구권자로서 과연 적정하게 행사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반성하고 또 고칠 점을 고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기각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찰도 영장청구권자로서 적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수사받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참여정부 2기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국무총리의 중책을 맡으신 이해찬 총리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께서는 개헌과 관련된 몇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하여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정·부통령제 개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현재 정부에서는 개헌에 관련된 준비는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병호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개인 사견으로 현행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식의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가 적합한 것인지 한번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인사청문회 때는 개인 사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내각을 통할해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에서 개헌에 대한 일체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건이지만 사건을 말씀드릴으로써 정부의 정책으로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암시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규 부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병호 의원** 감사원의 소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회계와 직무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감사원을 국회의 산하기관으로 하여 검찰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 현재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에 대한 결산, 그다음에 회계검사 그리고 감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원래 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행정부에 속한 형태도 있고, 의회에 속한 형태도 있고, 또 의회와 행정부 어느 곳도 아닌 독립기관의 형태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회의 감사 기능과 대통령 산하의 감사원의 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저희도 그런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적에는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호 의원 김선일 씨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국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민족자산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있는 중국인들과 상당히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고, 또 동남아에 있는 화교들이 중국 본토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경제 발전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 나가게 되면 고국과 단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교민청 같은 것을 신설해서 안전보호뿐만 아니고 한국민들이 세계 속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에 있는 한국민들이 우리 고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문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외동포의 민족자산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얘기되었습시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표하는 사항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국내에 와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포청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될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약 600만이 넘는 재외동포가 있는데 법적 지위나 이런 것이 현지 국가에서의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문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출신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출신 김재경 의원입니다.

부정부패의 오랜 고리를 끊고 민생을 두루 살피는 일꾼이 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17대 국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지만 원 구성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상대 당은 이미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어떠했습니까? 여야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서로 앞다퉈 민생을 외쳤지만 민생을 달래는 정책은 없고 권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만 국민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쓰레기 만두 파동, 분양원가 공개 철회, 수도 이전의 불협화음, 인사 청탁 파문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자금 중개의 기능을 상실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시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돈 많은 기업은 장롱 속에 현금을 꼭꼭 숨겨 놓고 다가올 금융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맡기고 싶어도 믿고 맡길 만한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증시가 들쭉대고 있습니다.

국내 우량 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2만 불 시대는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국가는 있습니까? 위기에 대처할 정부는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않고 경제를 챙기고 국가 발전을 고민하는 선량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요즘 세간엔 ‘우리에게 정부가 있는가’ 하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신과 무능력 때문입니다.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은 우리나라 군인이 아닙니다. 그의 피랍이 알려지고 사망하기까지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 작동 상황을 보면 적어도 그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런 대처 능력을 가진 정부를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번 김전일 씨 피랍 사건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 관리와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외교·안보 시스템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묻겠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소재지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과 법원 등에서 재외국민 소재지를 파악해 달라고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에서는 파악되는 건수보다 미파악 건수가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조차 못 하는데 국민이 어디서 어떤 일을 겪는지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외국민들이,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 나라마다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외공관의 공관 인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공관에 공관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파악이 안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재외국민들이 공관에 자기의 소재를 자발적으로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관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대한 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실종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 이해찬** 그래도 재외공관에 대한 신고가 필수적이지 않고 여행도 하고 일시 체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재외공관이 어떤 공관은, 저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불과 5~6명밖에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기본 업무만 가지고도 업무에 부하가 걸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이라크 대사는 김천호로부터 1만 5000불을 빌렸다고 그러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김재경 의원** 차용과 변제의 시기가 피랍 발생 후라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차용이유를 끝이곧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대사 임홍재는 피랍 사건 발생 후에 그런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져 있던 한인교회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돈 거래까지 하는 사이인데 김천호가 이라크 대사관 직원이나 대사한테 피랍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인교회를 방문한 임 대사가…… ‘피랍 사실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이런 말을 끝이곧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이라크 대사를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함에도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감사원에서 현지에 가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인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조사 결과와 또 여기 와서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라크 현지 대사는 현지 상황에서 해야 할 업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일부 재외교

민도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파병할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판단으로는 본국 소환 요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경 의원 감사원 조사에 기대를 크게 걸고 계신데 감사원은 지금 AP통신이나 김천호 씨의 통화 내역조차 확보를 못 하고 있고, 김천호나 임홍재를 상대로 한 조사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직원에게는 피랍 확인 전화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김천호 씨한테는 보호할 직원이 테러 단체에 납치가 되었는데도 공관에 알리지도 아니한 채 사망케 한 유기치사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 조사를 감사원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사실상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를 수사기관에 이관해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진상을 밝히는 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수사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당시 정황으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가지고 파악하기는 어려운 단계였고, 이미 국정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서 곧 상황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법률상 제약 때문에 통화 내역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리고 김천호 씨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 조사 못 응하겠다’ 그러면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모든 게 밝혀지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일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다른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해교전 2주년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이나 정치인 아무도 참석지 않아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장병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서해교전에서 사병들에게 보상된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약 4억에서 5억 5000

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망보상금이 3000~5700만 원, 보훈처 위로금이 1000만 원, 국가보상금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8000만 원까지 지급한 경우가 있고, 그 외 국민성금이나 군성금으로 2억에서 4억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그 외에 유족연금이 월 68만 원에서 82만 원 그리고 유자녀 학자금 지원 등 국가유공자 혜택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1인당 얼마라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사람마다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이번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면 변형만·김용성 씨한테 지급될 보상금이 대충 추정치로 1억에서 1억 6000이라는데 우리 장병들의 보상금이 그보다 많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고비처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청산입니까, 아니면 검찰을 견제하고 공직자 사찰을 위한 기구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 번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검찰 견제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패 청산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정부의 산하 정부 조직인 어느 특정 조직을 견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경 의원 금방 강 장관님은 ‘대선자금 및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로 검찰이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랬는데 총리께서도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검찰을 신뢰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신뢰합니다.

○김재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방위가 청와대의 지시로 만든 고비처 신설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그리고 올 5월 24일 대통령 지시로 서둘러서 고비처 신설안을

기획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고비처 신설의 목적이 '부패 척결이다' 하셨지만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기에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TV토론에 출석해 가지고 '안희정은 오래 전부터 나의 동업자, 동지다' 옹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라중금 사건은 재판 계류 중이었습니다. 검찰 중립성 측면에서 그 발언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당시 발언을 하게 된 정황이나 배경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안희정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한, 오랜 보좌 활동을 해 온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자기하고 가장 오래 해 온 비서가 그렇게 부정으로 구속이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것이지 그것이 무슨 검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경 의원** 작년 8월 광양 지역인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명 씨가 겪는 고초를 생각하면 밤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옹호를 했고 '강금원 회장과는 부부 동반 골프를 쳤으며 안대회 중수부장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 속에 검찰을 불신하고 견제하려는 의지가 대통령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일국의 대통령이 한 검찰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보복을 한다거나 불신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국가의 여러 가지 부패 청산을 위해서 엄정하게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고 오히려 부패 청산을 은폐하고 부패를 은폐하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이지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불법 부당한 지휘를 안 할 뿐이지 정당한 지휘야 왜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신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재경 의원** 대통령제 폐해 극복으로 책임총리제 도입 이런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또 다른 권력을 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표적수사나 공작정치나 이런 모습이 우리 17대 국회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비쳐집니까.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이른바 고비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각당의 의견이 지금 서로 좀 다른 것으로 보도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고비처는 독립된,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영향력을 받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오해와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반 장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 독립에 대한 집권세력의 실천 의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부패 없는 나라를 원합니다. 본 의원이나 한나라당도 국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고비처 신설 문제는 대통령이 부패 사정의 이름을 빌려서 국정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국정 참여를 통해서 개혁과 민주화를 이루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과 사정기관, 사법부가 모두 고비처의 감시 대상이 된다면 이 정부는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 개입하는 대통령 참여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우려를 갖고 법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법무 검찰을 위해서…… 장관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 대선자금과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경 의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부방위원

장이나 감사원장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정기구를 만들 만큼 그들이 부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장관은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부방위원장님이나 감사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고위공직자의 부패 실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기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다거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경 의원** 참여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에서 대선공약 점검을 했는데 그때 법무부에서는 고비처 신설을 반대하면서 ‘법무부 내에다가 특별검찰청을 두자’ 그랬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이지는 하지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 후로는 다른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기보다는 한시적 상설 그러니까 대선공약이나 여러 가지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한시적 상설 특검안이나 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의 재편을 위한 독립 검찰청안 여러 가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김재경 의원** 부방위가 대통령 지시로 고비처 신설을 검토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에 대한 신설 준비를 한 게 없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법무부 자체가 갖고 있었던 안은 법무부 산하에 독립 검찰청, 직접 수사 기능을 기존 검찰에서 떼어내서 독립 검찰청화해서 보다 더 독립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그 안과는 달리 대선공약과 총선공약에서 제시된 것으로 별도의 기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방위에서 대통령 직속 부방위 산하기구로 제안이 되어서 현재 논의 중인 것입니다.

○**김재경 의원**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가 끝나고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 검찰을 사실상 통제하기가 어렵다. 고위 공직자들을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내 직속으로 특별 사정기구를 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생각을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법무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선 작년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가운데 대선자금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대통령께서 직접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국가 권력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권력의 개입을 받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그 부분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자금 수사가 종결도 되기 훨씬 전부터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친 반부패만큼은 꼭 실천하는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끝나신 후에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고비처 신설안이 나온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장관께서는 대통령께서 검찰을 신뢰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김재경 의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법무부장관 강금실** 대통령께서는 정부 조직과 검찰을 비롯한 모든 기관의 최고 감독자이시고 지휘자이십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재경 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대통령께서는 겉으로는 검찰 독립을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불신감 표출로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안희정, 이기명, 이광재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 강금원 회장과 골프 회동,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중수부장 때문에 죽을 맛이다’, 그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고비처 신설의 주된 이유로 보이는데, 정부의 고비처 신설목적은 부패 척결입니까, 검찰 견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먼저 수사의 독립을 훼손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일반 여론이 마

치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표현들이 수사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처럼 또는 수사를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번도 훼손이 된 적이 없고 대통령께서도 훼손할 의사를 피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대선자금 수사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사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입장에서의 소회를 피력하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고 대통령의 진의도 그 이상은 아닙니다. 특히 ‘안대희 부장 죽을 맛’이라는 것은 검찰이 정말 수사를 잘한다는 반어법이었습니다.

○**김재경 의원** 좋습니다.

장관께서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데, 그 이유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고비처를 검찰 견제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는 권력을 갖는 기관을 신설할 경우에 또 관리·유지할 경우에 상호 기관 간 견제, 내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비처가 새로운 부패 방지의 임무를 맡게 된다 하더라도 고비처 자체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고비처의 업무에 대한 내부 견제 또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지키면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부방위가 고비처의 모델로 삼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는 우리하고 달리 검찰 조직이 그렇게 방대하지가 못하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우리는 대륙법계의 수사 조직을 갖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홍콩은 영미법계라서 기본 시스템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리고 비리 조사기관도 수사권만 가지지 기소권은 없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기소권은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사가 행사하는……

○**김재경 의원** 그리고 이 나라들은 대통령중심제도 아니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의원내각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 고비처는 70여 명 정도의 인력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수사 대상은 약 4500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 1명이 공직자 60명을 집중적으로 전담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이거 5호담당제도 아니고 나치의 비밀경찰도 아닌데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이런 수사기관을 설치합니까?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직동팀을 능가하는 사찰기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지금 말씀하신 인력이 많다는 취지인지 적다는 취지인지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직 그 규모나 인력 또는 구성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만드는 안을 보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경 의원** 집중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고비처에 기소권까지 준다면 공직자를 감시하면서 뒷조사하고 수사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대검 중수부에, 사직동팀, 감사원, 국정원, 기무사 권한을 합친 기형적인 거대한 권력을 대통령의 손 아래 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현재 정부안은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앞으로 특별히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재경 의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이 있다면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정책 비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법관이나 검사가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판결하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지금 참여정부 이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측면들은 지금 정부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적합하고 적법한 또 적절한 권한을 갖는 기구로 만들면 상당히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경 의원**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면 항상 편파수사, 표적수사, 이런 시비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한 수사마저도 이런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대통령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법무부장관 강금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기대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측면을 감안해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그리고 표적수사나 편파수사를 할 경우 법률 위반은 아니라서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고비처장은.

그리고 주무장관도 없기 때문에, 불신임 등의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회로부터도 아무런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래서 법무부가 내는 의견은 고비처 자체의 내부 견제나 기관 간 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체제에 따른 검사의 지휘 감독과 기소는 검찰이 맡고, 1차 수사 영역에 대해서 고비처가 맡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의 기관 간 견제 방법, 또 권력의 분리 외에 그 이상의 어떤 적절한 견제장치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경 의원** 사실상 견제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외교부가 그 역할을 못 한다고 제2의 외교부를 둘 수 없듯이 사정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해 가지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인력과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해서 제2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지요.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제2의 고비처를 만들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현재 고비처 정부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경 의원** 5월 24일 대통령 지시로 논의가 시작된 후에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성급하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검찰의 자체 개혁성과를 평가해 보고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 여부부터 그 구성이라든지 권한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의원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고비처는 유례없는 사찰 검용의 수사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직속하에 두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1950~70년쯤 후진 전제국가에서나 일어났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정열을 갖고 일하는 다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직면한 사태 앞에 침묵하지 말고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과 처신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희태**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양주·동두천 출신,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17대 국회를 시작하는 임시국회의 첫날 대정부 질문에 나서면서 본 의원은 벅찬 개인적인 기쁨을 느끼기에 앞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막중한 시대적 책무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지난 4·15 총선의 민의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싸우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일하라는 것으로 우리 17대 국회는 과거의 낡고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변화와 개혁을 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참여정부를 올바르게 견인해 내고 개혁정치로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17대 국회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한 달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한 달이 넘어서야 겨우 개원을 했고, 그 첫 작품은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도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 자성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의 기치 아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국민 참여가 있었는가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정책 추진에서 무엇보다도 민의를 살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과감하게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것만이

참여정부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려워만 가는데 지표상으로는 호전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역수지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시장 경기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수록 국민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여정부입니다.

현재의 몇 가지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으로 내각을 통할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도 대통령이 국정 대부분을 처리하며 책임 또한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 책임총리제를 실천하고 각부 장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를 지명한 것도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라 하는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그 역할을 다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현행 헌법하에서의 총리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각을 통할하는 기능 중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과 제청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어진 권한이고 법령에 따라서 국민에게 성실하게 직무에 복무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과 의무를 성실하게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책임총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보다는 보다 더 일하는 총리로서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모든 수혜자들에게 충실히 설명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성과로써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책임총리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

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을 하시겠다는 언명을 하셨고 모든 비서들에게도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참여정부의 화두는 당연 '정부혁신'입니다. 총리께서도 취임사에서 정부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국민들 또한 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의 개편 방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혁신방안 외에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정부혁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올해 지금 정부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모든 장차관과 정부혁신 관리관들이 다 모여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정부혁신에 관한 오랜 토론을 했습니다.

정부혁신의 골자는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을 옛날처럼 구조 개편을 급격하게 해서 조직의 변형을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간에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을 높여서 시스템이 잘 작동함으로써 구조 개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보상 체계를 강화해서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인사라든가 예산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높여서 각 부처가 책임을 지고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혁신의 기본적인 논리로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좀더 다듬어서 올해 내에 정부혁신의 성과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천도라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당장 수도를 옮기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은 상권이 붕괴되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하는 주장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됨에도 정부에서는 과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수도권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일

마나 구체적, 실질적으로 노력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면 수도권 주민을 설득하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또 더불어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수도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밀화돼서 이미 경쟁력을 스스로 잃어 가고 있는, 말하자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도 되고 지방분권화도 되지만 또한 수도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동북아 시대의 동북아 금융의 허브로서,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환경과 교통을 가지고서는 외국 자본의 유치라든가 외국인의 거주 환경을 옹기 만들어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총리가 공석이였기 때문에 공동추진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로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이 업무를 이제 관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를 지금보다 약간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산기지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80만 평의 공원 부지가 확보가 되고 청와대가 행정수도로 이전하게 되면 북악산이 약 35만 평에 가까운 아주 좋은 자연공원이 확보가 됩니다. 북악산은 조선조가 정도한 이래로 600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연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우리 국민들이 단 한 번도 발을 들여 놓지 못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20만 평에 가까운 자연공원이 서울 한복판에 시민의 숲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원을 갖고 있는 명소가 될 겁니다.

이 명소를 잘 개발해서 서울시민들의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로서의 기능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후나 주말에 와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서울시를 정말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여러 가지 지식기반 클러스터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곳인데 이 지역들은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경기 북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접경 지역은 이제 남북교류 평화공존 시대를 맞이해서 훨씬 더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고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바로 그 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지방자치체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아주 좋은 새로운 접근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천 지역은 국제자유도시로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지역으로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해 왔는데 지역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법을 우리가 다시 현실에 맞춰서 재정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수도권도 발전하고 지역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른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지방분권화, 수도권 과밀 해소, 이런 큰 틀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같이 아울러 가는 가장 중심축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실체를 말씀드리면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총리께서 그러한 논리를 우리 경기도나 서울의 수도권의 시민들에게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다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논리적 근거인 지역 균형 발전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또 소외 지역은 어

디인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에 투자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주·동두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지역은 국가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의 도로 인프라는 전국 최악입니다. 인구 260만 명이 사는 경기 북부 지역 전체의 고속도로 총연장이 9.6km에 불과합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도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경기 북부는 수도권으로 묶여 극히 불균형적인 저발전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 북부 지역 절대다수 주민은 경기북도를 신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총리의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수 이북 지역이 그동안에 수도권으로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본 것을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장관을 할 적에 그 지역을 다녀 보면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또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수도권이라는 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또 군사보호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제한되어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경기 북부 지역을 별도로 경기북도로 독립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 행정기관을 독립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텐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역 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경기북도에 지금 경기도 사무소가 나가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의 북도 사무소가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은 해소를 해 나가면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역 실정에 맞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지역이 상당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평택 주민 상당수는 미 2사단의 평택 지역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이나 파주 등지에서는 주한 미군부대 종사자와 기지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계를 걱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동두천 및 파주 주민의 피해 보상, 생계대책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미군 기지와 관련된 공여지지원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동두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동안에 미군 주둔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를 해 왔던 분들이 많이 있고,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부대 종사자가 약 3000명에 상가만 해도 4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군 기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미군 공여 지역, 주변 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쪽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정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소상한 내용을 주무장관으로 하여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 기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본방침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주역량을 제고시키는 대폭적인 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이것은 맞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실상 아무런 견제와 통제도 받지 않고 강력한 인사권을 무기로 소속 공무원들을 소위 줄서기시켜 장악하고 최근에 서울시의 일방적 교통체계

변경과 같은 독단적인 행정을 펴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방만한 경영과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끊임없이 불법과 비리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그것도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된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국론분열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자칫 핵심적인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국가의 힘마저 손상시키고 나아가 국정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정밀 재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방정부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여 국정에 동참하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해찬**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995년부터 실시해서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너무 잘못 인식이 돼서 위법한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는 공무원의 인사권까지 아직 등록되지도 않은 조직의 동의를 받아서 인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약정서가 교환된 것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체가 특정 조직에 의해서 인사권을 동의받도록 하는 것은, 노조를 지향하는 조직에 의해서 동의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가로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도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지방분권정책의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시도가 국가정책에 대해서 정책 자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구나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당성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와 납득을 시키는 국가의 노력과 그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지자체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착비리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투명해졌고 이번 총선을 경과하면서 국회와 정당 혹은 정당과 기업 간에 옛날 같은 정경유착은 이제 거의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중앙정부와 국회, 정당의 풍토가 지방정부에까지 그대로 잘 확산이 돼서 이제는 토착비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이른바 지방의 토호 세력들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투명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고 주민들의 인식하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도입될 경우에는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용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지난 16대 국회를 회고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국가의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검찰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국회 역시 그로 인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수많은 날을 허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용되는 의원 면책특권의 제한 방안이

만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면책특권 제한에 대하여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강금실** 면책특권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남용이나 폐단이 있었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보완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먼저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용과 폐단이 가능한 관행을 바꾸면 상당한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을 제외하고 있고 미국은 입법 관련 행위만 면책되고 정치적 행위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학자들도 폭력 행위 및 모욕, 사생활에 대한 발언 또는 명예훼손, 야유, 이런 것들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차적으로는 국회에서 관행을 고쳐 나가고 또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시면서 논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선거운동할 때나 늘 국민들에게는 이런 약속 합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면 추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관께서 검찰력의 정당한 행사라든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좀 연구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절차는 일부 부족한 점은 있지만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보장은 상당한 정도 진척되고 있고 구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구속적부심사, 기소 전 보석, 기소 후 보석 등의 재판과정에서 우리 사법부는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더구나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권력이, 특히 검찰권력이 국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의원에 대하여 부당한 체포를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다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사법제도의 완비성 정도로 볼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그 역사적 의의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아까 말씀드린 면책특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국회의원,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동안 불체포특권이 논란이 되어 왔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면책특권과 마찬가지로 국회 스스로의 자정과 제도 개선, 관행의 개선을 해 나가면 큰 논란의 소지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 안풍사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옛 안기부 계좌를 통해 신한국당 총선자금으로 들어간 1000억 원 예산횡령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강삼재, 김기섭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정성호 의원** 그 이유 중 하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안기부 예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강삼재 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이 있을 때까지 총선에서 사용된 불법자금이 안기부 예산이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1심 유죄선고 후 2심 도중에 돌연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정성호 의원** 강삼재 씨의 행위는 그렇다고 보면 분명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든가 아니면 그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불법자금 조성의 공범 관계에 있지 않겠나 하는 의심을 주고 있습니다.

강삼재 씨는 분명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했고, 그로 인해서 불법 혐의가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강삼재 씨의 진술은 공범 관계에 있을지도 모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안풍사건의 무죄선고는 신한국당이 범죄적 방법으로 조성된 불법자금을 총선에 사용했다

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1000억 원의 불법자금의 강삼재 씨를 통해서 신한국당 총선에 사용되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처벌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법 감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관께서는 안풍사건의 상고심과 관계없이 더 이상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강삼재 씨를 범인은닉의 혐의나 아니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불법자금 조성의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지휘할 의향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 부분은 2심 판결이 1심과 견해를 달리했을 뿐이고요, 물적 증거는 안기부 예산임이 입증된 상황에서 금액이 거액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보고서 사건의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강삼재 전 의원의 경우는 묵비권도 보장되어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진술을 하는 것을 곧바로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묵비권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항소심에 와서 하신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성호 의원** 법무부장관님,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민족 비극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는 41년 동안 출입이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생태 연구의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정성호 의원** 비무장지대는 통일 후에는 세계적인 평화도시와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여야 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비무장지대를 통일을 위한 거점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무장지대는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국내외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정부 부처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자원의 보존과 활용 계획을

구상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94년부터 유네스코와 함께 남북한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생물권보존네트워크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덟 번이 열렸고, 이 같은 네트워크회의에서 국제협력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존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화관광부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파주·철원 지역에 생태계 보존과 평화공원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고, 민간 학자들도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보존·관리해서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부에서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비무장지대 내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북한과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 협력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의 체제는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사 있을지도 모를 대량 탈북사태 등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단계적인 대응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하는 변화론의 입장과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 하는 불변론이 부딪쳐서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빚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북도 체제 생존과 개혁·개방을 향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남한 사회 내부에 동의의 폭이 넓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북한 체제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앞으로

도 노력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남북 관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 남북 관계 또 대주변국 관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각에서 비전문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한 각오와 자세로 통일정책을 펼 것이며 준비된 비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대북정책, 통일 문제는 전문성과 함께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잘 모아 내느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펼치는 통일정책에는 정치인 출신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24시간, 365일 이 일에만 전념해서 차질 없이 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구현하는 데 정성껏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임기 중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산 동래 출신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의원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출신 이재웅입니다.

오랜 시간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답안도 읽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도록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 좀 빠르게 진행할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서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저는 어제 오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 좀 겨우 안정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줄 아시고 좀 널리 해서(海恕)하십시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고 퇴진 운동으로 느낀다.”

대통령께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하셨지요? 제가 가슴을 조이면서 기사를 좀 빨리 보았습니다. 혹시 긴급조치법 같은 것을 또 제정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봉쇄하겠다는 이런 선언이 혹시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투옥된 경험이 있는 저에게 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그때를 스치게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두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 노릇 하기 힘들게 하는 대통령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걸핏하면 대통령 직 못해 먹겠다, 대통령을 퇴진시키려 한다면서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막가는 발상을 가진 대통령이 개명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열린 귀는 없고 오직 뚫린 입만 있는 대통령이신지 참으로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막가자는 대통령 앞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가슴만 답답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막가신다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마저 막갈 수는 없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하나하나 따질 것은 따져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30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제계수화를 가르쳐 주신 스승입니다. 수화로 통방(通房)을 하면서 정말 명석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신 분이요, 이렇게 놀라고 또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때의 스승으로부터 현 국정에 대해서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번 제17대 국회를 왜곡된 민의가 아닌 진정한 민의가 만든 국회다. 국민의 국회다. 시민혁명에 의한 국회다. 오로지 13대 국회와 이번 17대 국회만이 진정한 국회”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 극찬은 설마 열린우리당만을 두고 하신 말

썸은 아니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물론이지요.

○이재웅 의원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까지 다 포함된 정말 제17대 국회를 의미하신 거겠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이재웅 의원 그렇다면 국회에서 나오는 반대의 목소리도 존중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당연합니다.

○이재웅 의원 총리께서는 지난 총리 인준 청문회 때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은 대통령의 강조 어법이라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의원 그러시면서 본인은 “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의원 그리고 행정수도 건설은 어디까지나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하면서 누구나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고 발언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날, “대통령이 예민한 사람이어서 국민의 반응에 애가 탄다”고 이런 말씀을 인터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은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느낀다고 발언한 것도 이렇게 애가 타서 한 발언, 말의 강조 어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글썸, 김우식 비서실장께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제 하신 말씀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수도 건설의 중요성을, 그리고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웅 의원 저는 대통령의 퇴진이라고 느낀다는 말씀을 좀더 이렇게 완곡히 줄이려고 여쭙어 보았는데 애가 타서 한 말씀이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안 하시네요?

○국무총리 이해찬 아니, 김우식 실장님의 말씀의 그 정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재웅 의원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 사람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애가 타더라도, 애가 터지더라도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한 단어들이 단초가 되어서 탄핵이라는 그런 고초까지 겪으셨는데 방귀가 잦으면 어쩐다고……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낼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총리께서도 조금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어떤 점에 대해서요?

○이재웅 의원 걱정이 좀 되시지는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재웅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주제를 여쭙겠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이슈를 선점했던 그때 그 대담하고 기발한 공약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선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해찬 총리께서 혹시 하신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획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본부장 소관인 정책개발위원회에서 정책으로 입안된 것이고, 저는 당시 정책 개발에는 주로 참여하지 않았고 전체 선거캠프를 운영·기획하는 일을 주로 했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과 관계없이 2000년도에 제가 새천년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할 적에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 달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의 성격상 정권 후기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연구를 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웅 의원 그러면 그때 공약을 만들 때는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것을 국가기관을 몽땅 옮긴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당시 대선공약으로 낼 때는요?

○국무총리 이해찬 전에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공약은,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부지요,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기능을 옮

기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고 국회는 자체에서 판단해서 옮기는 것으로 했고 사법부는 구태여 수요가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재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는 청와대, 중앙정부 전체를 옮기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분권화 차원, 이것도 개념이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분권화 차원으로 생각하고, 과밀 해소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기관이라기 보다는 그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옮겨서 적절히 충청도에 배분하면 되지 않겠느냐……

○**국무총리 이해찬** 아닙니다. 청와대까지 포함 해서 행정 기능은 전체가 옮겨 가는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이재웅 의원** 처음에 대선 공약을 내놓았을 때 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대선 공약을 냈을 때 청와대 까지 포함해서 행정 기능은 전체가 옮겨 가는 것 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웅 의원** 제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의 진 행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초 창기 그 공약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의원** 찬반이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의 추이입 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의원** 한눈에 엇치락뒤치락하고 요 근 래 며칠 사이에는 상당히 반대가 높아졌다는 것 이 보이시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예.

○**이재웅 의원** 물론 여론조사라고 해서 모두 객 관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보면서도 아직도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행정수도 건설의 실체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 니다. 행정수도 건설이 단순히 행정기관 몇 개가 옮겨 가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의 기능이 몽땅 옮겨 가는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언론에서 정보를 제공하니깐, 많 은 사람들이 얘기를 떠들고 하니깐 이제 좀 정보 가 주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 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들 이 많이 헛갈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해찬** 국민들이 이렇게 혼돈을 겪 는 것은 금년 6월에 들어와서 갑자기 천도론이 부상 을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혼돈을 겪기 시작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선거 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것을 얘 기할 적에도 이미 행정 기능은 전체가 다 옮겨 가는 것으로 저희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작년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 때도 행정 기능은 일체 가 옮겨 가고 국회하고 헌법기관들은 국회의 동 의를 받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데 올해에 와서 천도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 나오면서 마치 옛날 봉건왕조의 도읍이 사람들 다 끌고 옮겨 갔던 것 같은 혼란을 국민들에게 주면서부터 갑자기 격앙된 분위기가 생겼는데 사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재웅 의원** 저도 천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가들도 언론에서 칼럼을 쓴다 든지 사설을 쓴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이라 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 했다, 수도 이 전이라 했다, 막 섞어 씁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행정수도 건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정 말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여론의 추이는 전 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 해집니다. 물론 어느 쪽이 우세해질지는 모르겠 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님께 좀 여쭙어 보고 싶습 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자의 정명론이라고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더군요. 혹시 강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장내 웃음)

○**이재웅 의원** 법학을 하신 분이어서 아마 이것은……

한자로 된 ‘정치’의 ‘정(政)’자도 바를 정(正)자 옆에 글월 문(文)자가 붙어 있습니다. 글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금실 장관님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강금실 장관님과 저는 코드는 달라도 우리가 보는 사전은 똑같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재웅 의원** 법전을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법전은 똑같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이재웅 의원** 그래서 법전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법치주의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이재웅 의원** 강금실 법무부장관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예, 읽어 봤습니다.

○**이재웅 의원** 읽어 보셨다니 설명드리기 더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제2조(정의) 제1호에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글썸, 2조1호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의원님의 말씀이 맞을 것으로……

○**이재웅 의원** 제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보면서 확실히 확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신행정수도라 함은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이 형

용사구를 빼 버리면 “신행정수도라 함은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의원님 말씀대로 법조문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웅 의원** 바로 이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수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 정의에서.

또 수도 건설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도 이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실력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법무부장관께서도 방금 동의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 강금실** 법의 이름 자체가 ‘행정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 기능을 가지는 수도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수도 개념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재웅 의원** 우리가 헌법상으로 수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두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헌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웅 의원** 그러면 우리가 국어사전의 뜻을 공유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국어사전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이재웅 의원** 다음에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라 함은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지역, 도시”, 수도라 함은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지역”, 수도란 “한 나라의 통치기관이 있는 지역”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엄밀히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국회와 사법부가 옮겨 가지 않아도 수도 이전입니다. 아무리 신행정수도 건설을 해서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건설, 이렇게 살짝 덮어 두어도 이것은 바르게 얘기해서 법적으로도 분명히 수도입니다. 사전적으로 분명히 수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입법부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이전은 현실적으로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어서 한나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또 다른

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입법부 이전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 대통령께서 행정수도 반대 운동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며 정권 퇴진 운동이라고 느낀다면 국민들을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도 떳떳해져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속임수는 이제 더 이상 써서는 안 됩니다.

수도 이전이 분명한데도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헛갈려 하십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헛갈려 하십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명칭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 법의 이름 자체가 신행정수도니까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이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보통 법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실천을 해 보다가 폐단이 나타나면 비판이 나오는 법인데 이것은 올해 1월에 제정되었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왜 시행도 전에 이런 논란, 건설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 법무부로서는 매우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재웅 의원** 강금실 장관께서 제가 말씀드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명칭을 여쭙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 그런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에 대해서, 스스로 만든 입법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재웅 의원** 많은 의원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옳았는지는 다들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시 총리께……

(「그만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만 잠깐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번 총리 인준 청문회 때 대한

민국의 국기를 바꾸자, 대한민국의 수도를 어디로 바꾸자 할 때는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해찬** 대한민국의 뭘요?

○**이재웅 의원**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꾸자, 태극기……

○**국무총리 이해찬**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예.

○**이재웅 의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해찬**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재웅 의원** 총리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여쭙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이해찬** 이재웅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자면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집무하는 이른바 정부행정기관 이것이 옮겨간 곳을 일반적으로 수도라고 그러합니다. 다만 수도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다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겼지만 법원은 안 옮기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를 마치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행정수도 건설 단계이기 때문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로 행정부가 가서 정착을 하면 그것은 행정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웅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늦게 해서, 맞추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마무리 발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행정수도로 명명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단지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는 허구를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수도 이전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것 이것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시 헌법적 사항으로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은 어느 쪽인지를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서면답변서】

○국무총리 이해찬

(권영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6자회담의 핵심은 북한 핵문제임. 한미동맹도 앞으로 그렇게 연결이 될 것임.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가 있다는 증거를 정부는 갖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촉구하고 있음.

-파키스탄 칸 박사의 진술 및 그 외의 관련 정보 등으로 미루어,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김재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이번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면, 변형만, 김용성 씨한테 지급될 보상금이 대충 추정치로 1억에서 1억 6000만 원이라는데 서해교전 장병들의 보상금이 그보다 많은지?

○서해교전 희생자 일시 보상금은 사망자 6명

의 유족에게 각각 4억 4100~4억 4700만 원, 전상자 4명에게 각각 4200~1억 5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연금으로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 부상자에게는 21만 7000~80만 8000 원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경우 보상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데 비해 서해교전 희생자의 경우 일시불 지급과 동시에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므로 이분들의 공로를 금전적으로 비교·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 : 군인사망보상금(3100~3700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 : 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만 원)

(정성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 주민의 요구 및 공여지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동두천 등 공여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우선 추진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검토할 계획임.

○미군기지와 관련된 공여지지원특별법 제정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변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동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기반 조

성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주한미군공여지주변지역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검토 중에 있음.

제248회국회(임시회)의사일정

2004. 7. 9.~7. 15.

일 자	부 의 안 건	비 고
7. 9(금) 10:00	1. 제248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정치에 관한질문 3. 안건처리 ※ 휴회결의	○7. 5.~7. 15. (11일간) ○7. 10.(1일간)
7. 10(토)	휴 회(1일간)	
7. 12(월) 10:00	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질문	
7. 13(화) 10:00	1. 경제에 관한질문	
7. 14(수) 10:00	1. 사회·문화에 관한질문	
7. 15(목) 14:00	1. 안건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7.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정경유착과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체도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금품수수 등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상을 확립하고, 정경유착을 청산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체도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7.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규제개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기업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의 과감한 규제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여전히 중복규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 애매모호한 규제, 사전적·포괄적 규제 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며, 부정부패와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더구나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닌 규제가 늘고 있으며, 규제심사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입법도 적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우리 국회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노력도 거의 없었음. 이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부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음.

앞으로 국회는 법률안 등 안전심사시에 규제사항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며, 특히 규제심사회피를 위한 법률안인지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세제 및 병무분야와 같이 규제심사가 소홀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정부기구와도 협조를 원활히 해야 하고, 규제여부나 규제수준에 대한 정부부처내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것임. 나아가 규제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 고용창출, 새로운 산업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서비스개선 등과 관련되는 규제를 개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규제개혁을 국회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규

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7.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증진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3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현재 남북관계는 북핵다자회담이 진행 중이고,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군사·외교·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와 협상이 행해지고, 경의선·동해선 도로 연결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의 개혁·개방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발전시키고, 거래의 염원인 통일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원칙과 규칙을 확립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7.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국내 민간소비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젊은이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기업투자의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불합리한 경제규제 완화 그리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및 국제규범에 맞는 노사문화의 정립이 시급함.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여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7.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미래한국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며, 특히, 미래성장산업을 발굴·뒷받침하고, 미래한국의 핵심적 경쟁력인 교육 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으며, 역사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야 하며, 20~30년 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산업을 발굴·뒷받침하고, 미래한국의 핵심적 경쟁력인 교육 발전을 최우선적 국가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발전적 미래는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한다

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기본적 방향하에서 미래한국의 발전지향적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등 미래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09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국환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태희
장경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기권의원(2인)

신중식 유필우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투표의원(215인)

찬성의원(210인)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세	권오을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복기왕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신중식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김종인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이상득	이상락	이상민	이상배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복기왕
이은영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신국환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윤석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종복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조경태	조성래	조일현	조정식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진수희	진영	천정배	최규식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이계경	이계안	이광재	이균현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문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락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이상민	이시종	이상열	이석현
황우여	황진하			이승희	이원영	이영순	이영호

반대의원(5인)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조승수
천영세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투표의원(218인)

찬성의원(218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광재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락
이상민	이시종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원영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이병석	이상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임인배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윤석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종복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선교	한화갑	허천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투표의원(218인)

찬성의원(216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석준	김선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미경	이방호

기권의원(2인)

김병호 맹형규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20인)

강기갑	강기정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단병호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병석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진수	박찬숙	박혁규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박형준	박홍수	박배기	박배일	김김양	김영덕	김영선	김영우
변재일	박복기	배서갑	배서영	김김영	김영춘	김용갑	김우재
서재관	박선병	서손봉	서송영	김김원	김원웅	김재경	김종률
송영선	신계륜	신신국	신신재	김김재	김정부	김충환	김태년
심상정	심재덕	심민석	심안병	김김태	김진표	김학송	김학원
안경률	안명옥	안택수	안안홍	김김길	김태환	김현미	김희오
안상수	안영근	안동연	안오영	김김주	김혁규	김효석	김희선
양승조	엄호성	엄우원	우우윤	김김정	김홍일	김경원	김노영
오제세	우상호	유기준	유기홍	김김래	김나현	김희송	김단병
우제항	유원혜	유재건	유정복	김김상	김문병	김문석	김문학
유선호	유인태	윤원호	윤호중	맹희상	민병광	박계동	박근혜
유필우	윤건영	이계경	이계안	박기춘	박명일	박병석	박상돈
이강래	이광재	이군현	이방호	박성범	박영선	박세환	박순자
이계진	이명규	이미경	이상민	박승환	박찬석	박재완	박종근
이기우	이상열	이석현	이승희	박혁규	박형준	박찬숙	박창달
이병석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배기선	배일도	박원우	박희태
이상배	이은영	이인영	이재창	복기왕	서갑손	서병숙	서영길
이시종	이주호	임인배	임채정	신계륜	신상정	신중식	신재엽
이원영	이호웅	장윤석	장문현	안경률	안상수	안명옥	안민석
이정일	이호수	장갑윤	정중길	양승조	양영식	양형일	안택수
이혜훈	장경희	정성호	정승수	오영근	오제세	우제항	안호성
임태희	장재희	정화원	조승용	우윤준	우기홍	유선호	안원희
전여옥	정형근	조성태	조승영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승민
정병국	조성래	주성영	주승용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유재건
정청래	조정식	진규식	최병국	이영호	이강재	이강래	이경숙
조경태	지병문	최연희	최용국	이광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조일현	최순영	최재천	최철국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주호영	최재성	한선교	한화갑	이상득	이상락	이상민	이상배
천영세	최명숙	한문우	한미영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최성기	최애자	황	황진하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최인원	현준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한광원				이종걸	이해봉	이주호	이철우
허천형				이호웅	임인배	이해찬	이혜훈
홍재형				장경수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出席議員(268人)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성 영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선 교 한 화 갑 허 천 허 대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황 진 하

○出張議員(2人)

이 성 권 정 장 선

○請暇議員(23人)

강 봉 균 광 성 문 김 광 원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재 원 김 춘 진 류 근 찬
 서 상 기 신 기 남 우 제 창 이 광 철
 이 화 영 임 종 석 임 종 인 장 복 심
 장 영 달 정 몽 준 정 의 용 정 의 화
 조 배 숙 최 규 성 한 병 도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 무 총 리 이 해 찬
 통 일 부 장 관 정 동 영
 법 무 부 장 관 강 금 실
 행 정 자 치 부 장 관 허 성 관

【報告事項】

○特別委員長選任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 원 장 남 경 필
 (7월5일)

○幹事選任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국회개혁특별	문석호	열린우리당
	심재철	한나라당

(7월5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제사법	최용규	열린우리당
	장윤석	한나라당
정무	김영춘	열린우리당
	권영세	한나라당
재정경제	강봉균	열린우리당
	이종구	한나라당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통일외교통상	유선호	열린우리당
	박계동	한나라당
국방	김성곤	열린우리당
	박진	한나라당
행정자치	박기춘	열린우리당
	이인기	한나라당
교육	조배숙	열린우리당
	이주호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	홍창선	열린우리당
	서상기	한나라당
문화관광	우상호	열린우리당
	정병국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	조일현	열린우리당
	이방호	한나라당
산업자원	오영식	열린우리당
	안경률	한나라당
환경노동	이목희	열린우리당
	배일도	한나라당
건설교통	이호응	열린우리당
	김학송	한나라당

(7월6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국회운영	이종걸	열린우리당
	남경필	한나라당
보건복지	이기우	열린우리당
	고경화	한나라당

(7월7일)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정보	임종인	열린우리당
	정형근	한나라당
여성	이경숙	열린우리당
	진수희	한나라당
윤리특별	이상민	열린우리당
	서병수	한나라당

(7월8일)

○常任委員辭任및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천영세	심상정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아니하는 의원
여성	강혜숙	김현미	열린우리당

(7월7일)

○特別委員辭任및補任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	서재관	정성호	열린우리당
이라크내테러 집단에의한한 국인피살사건 관련진상조사 특별	김종인	이상열	어느교섭단체 에도속하지 아니하는의원
국회개혁특별	원희룡	이혜훈	한나라당

(7월7일)

○議案提出

國會法中改正法律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박찬숙·유정복·장복심·심재철·김석준·이상열·전재희·이재오·박재완·이근식·안경률·김재원·서병수·황우여·정병국·최인기·박승환·선병렬·김충환·심재덕·김영춘·노현송·이계진·신국환·김태환·윤건영·권경석·김영숙·고진화 의원 발의)

7월5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출판및인쇄진흥법중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박찬숙·유정복·박성범·류근찬·노웅래·심재철·김석준·맹형규·김맹곤·이재오·박세환·안상수·이해봉·선병렬·김영덕·김충환·심재덕·황우여·최인기·강혜숙·구논회·박진·박재완·김태환·강재섭·김기현·손봉숙·이재창·안택수·정성호·노현송·이인기·이영호·신국환·윤건영·김영숙·이시종 의원 발의)

7월5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7월5일 정갑윤·강재섭·김기현·김석준·김영춘·김정부·김태환·김형주·노웅래·노현송·박명광·선병렬·신국환·심재철·안상수·엄호성·유시민·이광철·이상락·이영호·이재오·이재창·이혜훈·전재희·정몽준·정문헌·정병국·정성호·최철국·허태열·황우여 의원 발의)

7월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월5일 김병호·안택수·안경률·엄호성·정의화·권철현·김무성·박승환·김희정·김

형오·이인기·정화원·박형준·허태열·조경태·심재철·정형근·서병수·김정훈·이성권·유기준·안상수·정성호·고진화·고홍길·류근찬·이재창·이혜훈·오제세·윤원호·정병국 의원 발의)

7월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案(전재희 의원 대표발의)

(7월6일 전재희·박진·황우여·심재철·이인기·박재완·이재오·정문헌·강재섭·박세환·김석준·정화원·윤건영·박찬숙·고진화·권오을·이혜훈·정병국 의원 발의)

7월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7월7일 홍재형·노웅래·황우여·유정복·이상경·김우남·송영길·오제세·정성호·정장선·박병석·조정식·김태홍·김종률·유시민·홍미영·조경태·박명광·김교홍·안상수·박영선·이종걸·정종복·심재덕·김영주·허태열·구논회·정병국·문병호·김석준·임종석·최용규 의원 발의)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

(7월7일 이계안·박영선·김종률·문석호·송영길·박병석·김충환·유정복·서재관·노현송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7월7일 권오을·유정복·박재완·이상락·윤원호·박찬숙·신국환·김태환·박명광·전재희·정병국·노현송·김명주·이기우 의원 발의)

地方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7월7일 권오을·유정복·박재완·이상락·윤원호·박찬숙·신국환·김태환·박명광·전재희·정병국·김명주·이기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김태환 의원 발의)

(7월7일 김태환 의원 외 32인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國會法中改正法律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7월7일 박영선·김명자·김현미·장향숙·이은영·박명광·안민석·민병두·송영길·정덕구 의원 발의)

7월8일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조성래 의
원 대표발의)

(7월7일 조성래·황우여·김성곤·최재천·구
논회·강길부·신국환·염동연 의원 외 10인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248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7월8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월 5일 (11일간)
7월1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미래전략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5건 7월8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國會議員및國會議員배치등에관한規則中改正規則案

(7월8일 박영선·강기갑·강기정·강창일·고
진화·권경석·권선택·권영길·김교홍·김
근태·김덕규·김동철·김부겸·김명자·김
원웅·김재윤·김춘진·김현미·김홍일·노
현송·단병호·류근찬·문학진·문희상·민
병두·박기춘·박명광·박재완·박찬석·박
홍수·배일도·백원우·서재관·송영길·신
국환·신중식·신학용·안민석·안상수·양
승조·염동연·오제세·우제항·원희룡·유
기홍·우상호·유승민·유승희·유인태·유
정복·윤호중·이계안·이미경·이상락·이
시종·이영순·이영호·이원영·이은영·이
종걸·임종석·임종인·장경수·장항숙·정
덕구·정몽준·정청래·조배숙·조성래·최
규성·최규식·최성·한명숙·홍재형 의원 발
의)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
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7월8일 안상수·이해봉·김형주·노현송·허
태열·김재원·유기준·최인기·정병국·박
세환·김영덕·심재덕·안명옥·강혜숙·안
홍준·신국환·김태환·김석준·이재창·이
인기·최재성·김기현·이영호·최용규·이
종걸·김무성 의원 발의)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사무총장(남궁석)임명승인안

(7월8일 의장 제의)

○推薦依頼書提出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7월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제출)

○書面質問書提出

재일동포에대한정부의정책에관한질문서

(7월5일 임종인 의원 제출)

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질문서

(7월5일 장항숙 의원 제출)

이상 2건 7월5일 정부에 이송

○書面答辯書提出

이라크에서납치된한국인인질피살사건에관한질문서
에대한답변서

(7월6일 정부 제출)

쓰레기만두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7월7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공항운영성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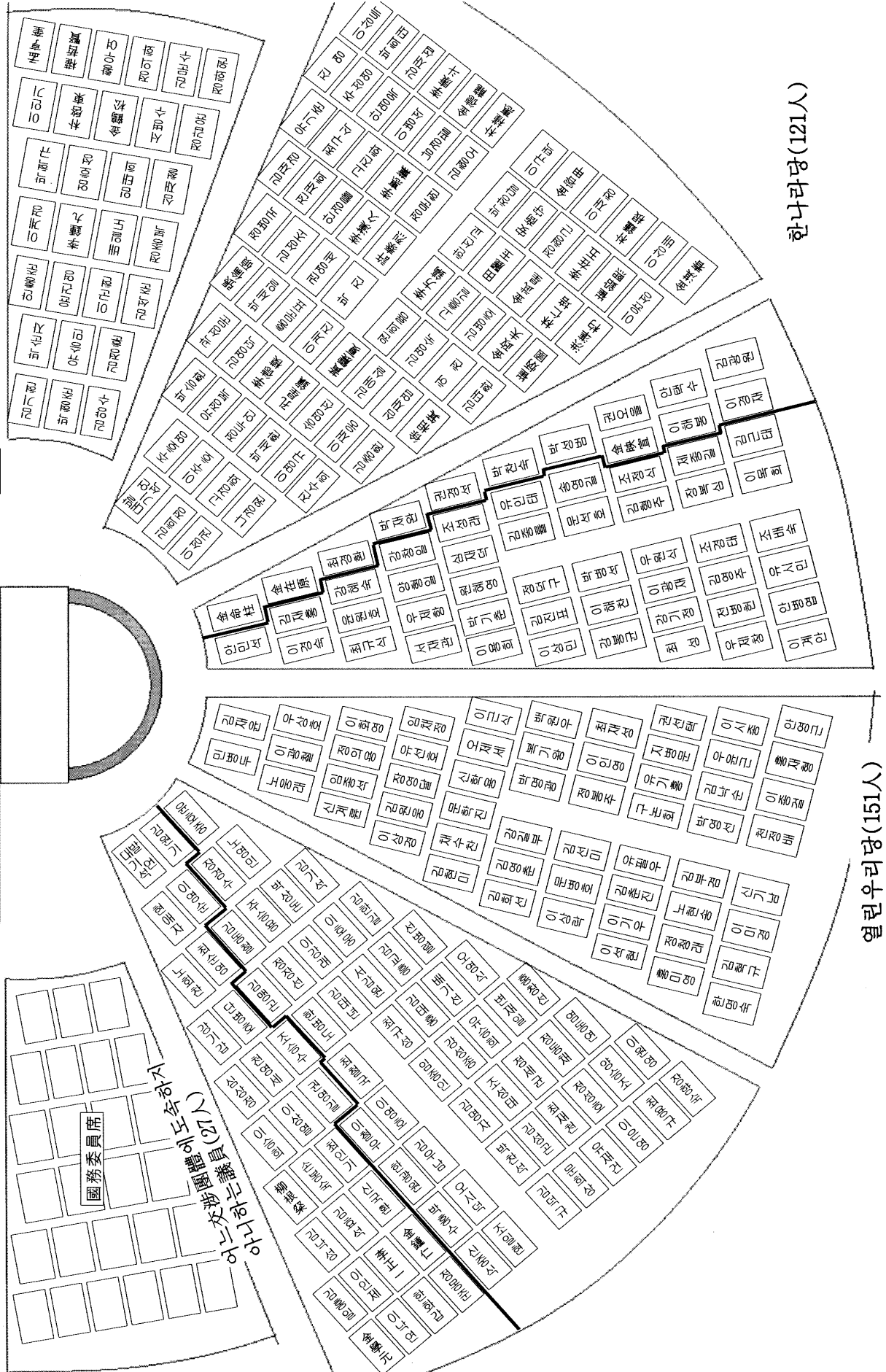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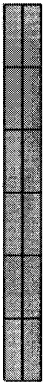
(7월6일 한국공항공사사장 제출)

7월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

2004. 7. 8. 현재

본회의장의석표

議長



열린우리당(151人)

한나라당(121人)